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토론회

2024. 8. 21. (수) 16:00~18:30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축사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흥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사회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좌장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지부장)

발제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토론자

박진보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박민아 (구로구 학부모)

임조연 (서울동신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지인 (서울등촌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프로그램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목적

- 교육부의 초등늘봄학교 정책 관련하여 서울시는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시범 실시했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늘봄학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발표자

- 발제**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 사회**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좌장**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지부장)
- 토론자** 박진보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박민아 (구로구 학부모)
임조연 (서울동신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지인 (서울등촌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진행순서

구분	시간	진행	비고
등록	15:30~16:00 (30)	▶ 등록	
개회식	16:00~16:25 (25)	▶ 개회식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축사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흥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사회) 박은경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16:25~16:30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 이동	
주제 발표 및 토론	16:30~17:00 (30)	▶ 발제 -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좌장) 강혜승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지부장)
	17:00~17:50 (50)	▶ 토론 - 박진보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 박민아 (구로구 학부모) - 임조연 (서울동신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 김지인 (서울등촌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질의응답	17:50~18:30 (40)	▶ 질의응답	

contents

초등돌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토론회

축 사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09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1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3

발 제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15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55

토 론

박진보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75
박민아 (구로구 학부모)	83
임조연 (서울동신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89
김지인 (서울등촌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99
서울시교육청 돌봄학교 담당자	105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축사

김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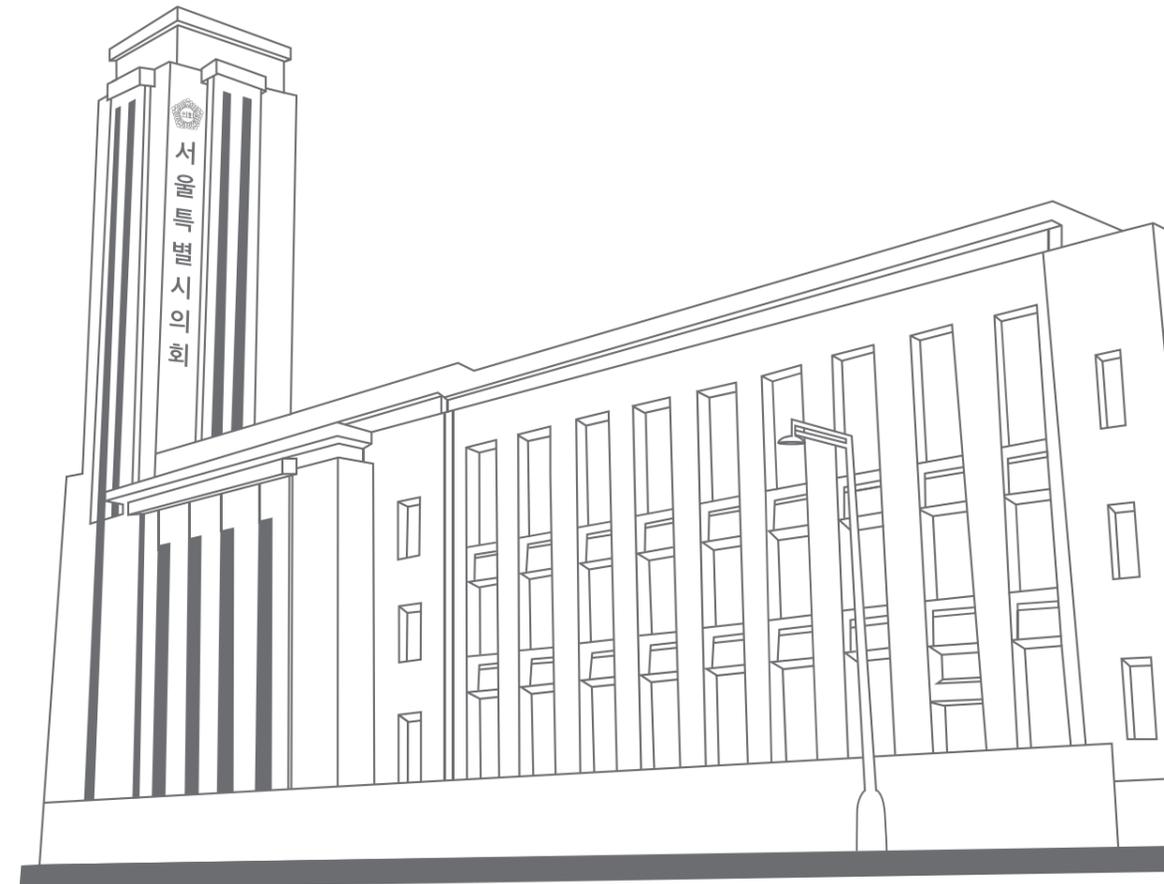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입니다.

오늘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돌봄학교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봄학교는 국가가 방과 후 교육복지를 책임지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와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돌봄학교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돌봄학교의 본질적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돌봄을 강화하고 그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돌봄을 배제한 채 교육프로그램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정 단체를 지목해 압박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교육 정책은 모든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의 불안정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모든 관련 주체들, 즉 교육청, 학부모, 교사, 교육공무직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회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돌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경력 단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돌봄학교 정책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하고, 돌봄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축사



<초등돌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워킹맘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해, 빠른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이 많은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문이 트이기 전인 영아 시기나 엄마와의 애착이 중요한 2-3세 시기도 잘 견뎌온 워킹맘들이 가장 많은 퇴직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돌봄학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하여 아침 정규수업 전과 수업 후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입니다. 돌봄학교는 우선순위와 추첨 없이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돌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력, 공간 부족이 심각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부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원이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돌봄학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봄학교가 그 이름처럼 ‘돌봄처럼 따뜻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교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돌봄학교 정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주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과 돌봄 정책은 그 자체의 추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구정책, 사회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수많은 사회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그 방향 자체로는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학기에는 150개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면시행을 앞둔 지금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인력 및 공간의 부족과 업무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6개월 가량의 늘봄학교 수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오늘의 토론회는 늘봄학교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저학년 초등학생에 대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그 누구의 희생도 없는 늘봄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는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의 작은 우주인 서울의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주**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늘봄학교, 변형된 전일제학교
방과후에도 학습 강화... 돌봄은 구색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늘봄학교, 변형된 전일제학교 방과후에도 학습 강화... 돌봄은 구색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박성식

■ 늘봄학교가 등장한 사회적 배경

1. 극한경쟁 자본주의가 초래한 저출생과 장시간노동

- [출생아 급감] 1970년 101만명 → 2012년 48만명 → 2022년 24.9만명
- [합계 출생율¹⁾] 2022년 0.78명 → 2023년 0.72명 → 2024년 0.68명
- 개인·가족 모두가 총력을 다 해 불안정·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장시간노동 수행
- 취약한 양육환경과 경쟁교육으로 시장돌봄·사교육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사회

2.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에 따른 교육 불평등 및 교육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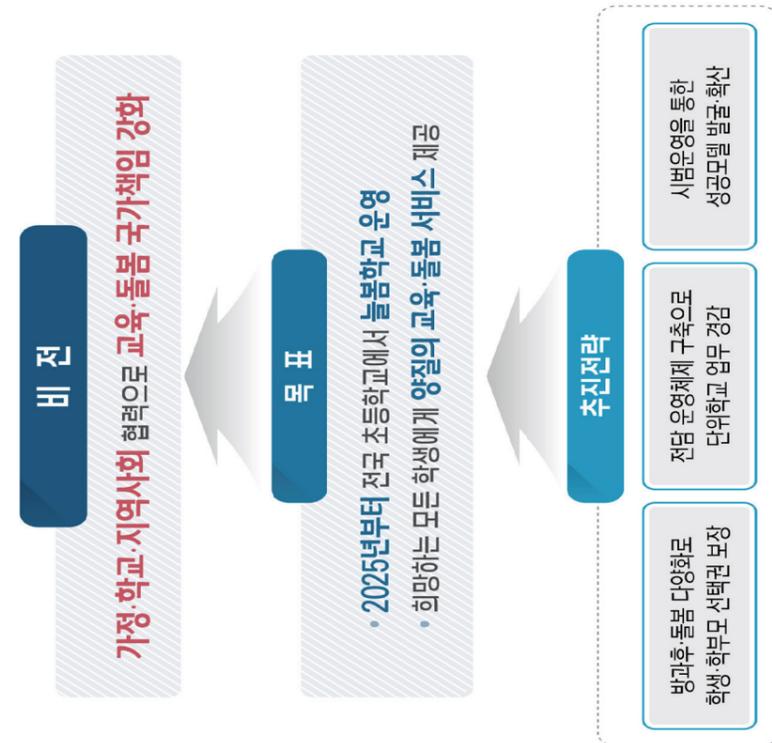
-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 걸쳐 양극화가 확산
- 유초중고는 물론 대학, 사교육까지 교육 격차와 양극화가 심함
- 지방 소멸 위기에 따라 지방의 교육 및 양육 환경도 심각하게 저하 됨

3. 보수도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

- 국가·지역사회·학교가 책임지는 공적 양육지원 체계(교육복지 등)가 절실함
-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양육 및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상향평준화 필요
-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방과후에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 필요(사교육 축소)

1)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 지표가 2미만, 즉 한 여성이 평생 2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저출생 국가로 분류한다. 1이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뤄진다.

○ 2023년 1월 1차 발표



○ 2024년 2월 2차 발표



■ 늘봄학교에 대한 운동사회의 오해와 편견

1. (편견) “윤석열 정권은 시장주의 정권, 늘봄도 시장주의”

- 늘봄학교 초기엔 덮어놓고 시장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비판

2. (오해) “20시까지 돌봄교실에 묶어 놓는 아동학대 정책”

- 20시까지 과잉 돌봄으로 이해하는 오해는 정책홍보 탓
- 공적돌봄이 간절한 학부모 유권자의 지지표를 얻으려는 욕심이 빚어낸 오해

■ 늘봄학교의 슬로건(방향과 원칙)



- 국가가 책임지고 방과후과정을 공적으로 운영(교육복지)
- 학교에 교육복지인 방과후과정 운영체계를 확립(학교공공성)
- 그러나 사회적 합의 없는 속도와 디테일, 방과후학습 강화는 문제
- 변질된 비전과 목표: 세계 최고 늘봄학교, 돌봄 소외시키는 종합교육프로그램

■ 핵심 세부정책: 변화의 열쇳말

1. 늘봄학교의 변화 키워드1: 전일제학교

- 오전에 교육이 끝나는 초등학교가 아님
- 오후 방과후 교육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전일제학교
- 늘봄학교의 핵심: 1~3시 맞춤형 프로그램
- 돌봄도 해결? 동시에 사교육 문제도 해결?
- [문제] 그러나 돌봄(놀이와 쉼, 정서적 성장)보다는 학습만 늘리는 방향

②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직적 구조

시간대별 돌봄교실 퇴실 학생수 <교육부, '23년>

구분	~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	~오후5시
총 이용자	15,434명	79,176명	207,882명	291,959명
30만명중	(5.1%)	(26.3%)	(69.2%)	(97.1%)

-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는 데 한계

* '23년, 전체 일반학급 수(12.6만개) 대비 돌봄교실 수(1.5만개)는 약 1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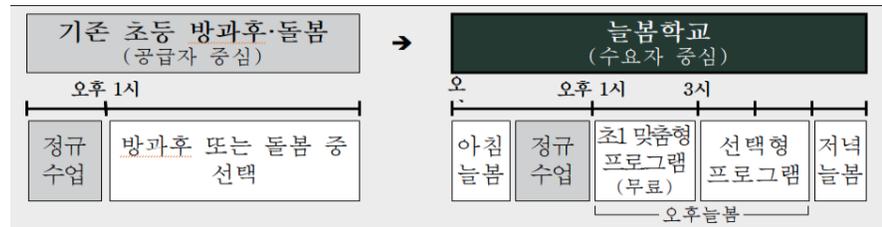
2. 늘봄학교 변화 키워드2: 방과후과정 운영체계 통합

-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경계 없이 통합운영
- 통합운영 체계인 늘봄지원실(늘봄실무사)신설

- [문제]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업무 범위 혼란
- [문제] 학생 이동 많아 업무 복잡

○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또는 돌봄 중 선택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의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시] '24년 초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 아침·저녁늘봄은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제공하고, 저녁늘봄 참가 학생에게는 석식 제공

3. 늘봄학교 변화 키워드3: 원하는 학생 모두 수용

- 전일제학교나간 전교생이 원하면 모두 수용
-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게 정책목표
- [문제] 돌봄교실 아닌 교육프로그램 확충에 치중
- 돌봄 입급기준 및 정원 없음(일시적 과밀, 혼란 우려)
- [문제] 돌봄교실의 위상과 역할 축소, 질 저하 우려

○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예) (기존) 돌봄교실 신청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존재
→ (개선) '24년 초1은 늘봄학교(기존 방과후·돌봄 포함)는 입급기준 없음
'24년부터 초등 방과후·돌봄 이중체계 통합·개선 →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

○ **(늘봄교실 학생수 자율화)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1개 실당 학생수를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

* (기존) 늘봄교실당 학생수 20명 내외 → (개선)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 늘봄 정책과 다른 학교 현실

-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통합운영이 아닌 현실은 분리운영(다행인지...)
- 방과후학교강사 맞춤형 프로그램에 진입 못하고, 기존 학생수도 감소 ... 줄속 시행으로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 나타남(해고불안, 수입감소)
- 정책과 달리 교사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돈벌이(학생은 수업의 연장)
- 장애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인력 추가 배정 없음(특수교육실무사 업무 과중)
- 돌봄의 질 향상과 공간 확충 등 돌봄 개선은 없음

■ 폐기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는 늘봄학교

- 저출생시대,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높음
- 학교에 별도로 방과후과정 운영체계 확립 긍정성 있음 (반면, 교사노조 출신 백승아 의원: "돌봄은 학교의 기능이 아니다")
- 돌봄교실 위상과 역할과 유지와 질적 향상 필요하지만 돌봄 개선은 회의적

■ 개선 없으면 법제화 등 저지

-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대응 통해 디테일 바로잡아야 함
- 개선 없이 문제 계속되면 법제화는 저지하고 차기 정권에서 전면 재검토

※ 참고1: 학교비정규직 입장의 늘봄학교 개선점

1. 약속한 늘봄학교 비전의 왜곡: 돌봄 위상 격하

- 돌봄과 교육을 통합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돌봄 현장의 입장(돌봄전담사의 입장)에선 개선 효과가 없음. 아침·저녁으로 돌봄시간만 확장.
- 돌봄의 위상과 질 하락 우려: 돌봄을 늘봄 프로그램(방과후강사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틈새돌봄(머물다 가는 단순 탁아)으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음. 안전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과 쉼, 놀이와 관계형성 등 돌봄 고유의 가치와 비전이 없음.
- 다른 지침과 달리 노조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든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늘봄과정을 늘봄 프로그램(외부강사 운영), 늘봄교실(돌봄전담사 운영)로 구분하여 각각의 고유성과 성격을 부여하지 않고 ‘늘봄 프로그램’으로 통칭하며, 배움과 학습만 강조함. 즉 돌봄의 위상과 질적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을 구축하는 게 늘봄학교인데, 돌봄교실과 돌봄전담사 확충 계획이 전무. (이러면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선 2026년엔 6학년까지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함)

2. 늘봄학교 행정(늘봄지원실) 운영체계 혼란

- 늘봄지원실장: 교사출신(임기직 연구관)이나 행정공무원이나?
-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 혼란: 두 가지 상반된 지침 존재(△ 2024년 2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 “늘봄학교 행정업무 일체 전담”, △ 2024년 5월 늘봄실무사 채용·배치 가이드라인: “돌봄전담사가 하던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 1학교 1명 이상 충분한 늘봄실무사 배치로 돌봄전담사는 돌봄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돌봄전담사에게 돌봄 행정업무 부과할 거면 전체 전일제 전환으로 근무여건 보장
- 늘봄지원실 인력 배치의 탄력성 없음: 전교생이 원하면 전교생이 참여하고, 시간별 이동성도 많은 방식이 늘봄학교라 업무가 상당하고 복잡할 것임(이

점은 교육부도 인정). 따라서 업무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실무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1명으로 제한을 뒤서 향후 늘봄학교 참여가 확대되면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갈등이 우려됨.

- 늘봄지원실 공간: 별도 공간 없이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더부살이, 업무공간에서도 통합 방과후과정(늘봄학교)의 위상과 고유성 보장해야 함
- 민원 대응 업무의 위험: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민원에 대한 전담 책임을 늘봄실무사 개인에게 지우고 있음.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보호 방침과 마찬가지로 학교 등 기관 차원의 대응과 처리 방침이 늘봄학교에도 적용해야 함.

3. 학교비정규직 배제하는 1~3시 ‘맞춤형 프로그램’

- 방과후강사 수입 감소 등 생계 위협(교육부도 인정): 교육부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본 인력은 방과후강사라고 정책을 짰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방과후강사를 배제한 채 외부단체(대학, 업체 등)나 교사들의 돈벌이 시장이 되고 있음. 교육부는 2학기엔 개선된다고 하지만 현장의 관성을 되돌릴 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방과후강사들이 안정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교사들처럼 강사료도 6만원 선으로 현실화하여 인상해야 함.
- 1~3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음: 맞춤형 프로그램과 동시에 돌봄교실도 운영하지만 학부모들이 맞춤형 프로그램과 별개로 선택할 수 있는 돌봄교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없음. 맞춤형 프로그램 쏠림과 돌봄교실 합반, 돌봄전담사에게 행정업무 부과 등의 현상이 나타남.
- 맞춤형 프로그램에 교사만 더 높은 강사료까지 주면 참여시키는데, 스포츠강사 등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육공무직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함. 교사만 추가 수입을 주며 참여시키는 것은 기회의 차별임.

4. 특수아동 늘봄학교 활동 보장을 위한 인력대책 부실

- 늘봄학교로 특수아동의 늘봄학교 참여도 늘고 보장해야 함. 그러나 늘봄학교 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인력 대책(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문제로 기존에 교육과정의 지원을 담당한 특수교육실무사에게 늘봄학교 지원까지 추가로 더 맡으라는 일방적 업무지시로 인한 업무 과중과 갈등 문제가 발생.
- 늘봄학교 신규업무는 기존 신규 인력이 맡도록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며, 교육공무직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남.

5. 현장 의견 반영한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통합해 늘봄학교 버전으로 완전 개정하는 작업이 2학기 중에 진행 됨.
- 늘봄학교 길라잡이는 학교에서 실제 참고하는 늘봄학교의 디테일까지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현장 지침임.
- 여기서도 앞서와 같은 문제가 지속돼선 안 되며, 반드시 현장 운영 당사자(노조 등)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협의로서 작성해야 함.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부는 노조에 약속했으나 약속 이행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교육부는 협의하는 모양새는 갖추더라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을 무시하고 일방 시행하는 우려가 상당함.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개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2024. 2.



목 차

I. 추진배경	1
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1
2.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2
II. 추진방향	5
III. 추진과제	6
1.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6
2.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13
3.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18
IV. 달라지는 점	20
[붙임1] 소요예산(안)	21
[붙임2] '24년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22

I. 추진배경

1.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②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③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미래 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④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놀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5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2.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1 합계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 절실

- '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23년 261만명에서 '30년 161만명까지 감소(38.3%↓) 전망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2~'30년 초등학생 수 추계 (통계청, '23년)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학생수(만명)	270	261	249	234	220	204	187	173	161

-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 국가는 아이 한명 한명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2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 유치원·어린이집(3~5세)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중

'23년 초등 학년별 전체학생 대비 방과후·돌봄 이용률(%) <교육부, '23년>

구분	평균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방과후	50.3	70.8	66.1	51.9	47.2	37.9	31.7
돌봄	11.5	34.5	25.9	6.1	3.0	1.5	1.2

-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초1학년, 오후1시)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이는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

- * 워킹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50.5%)' 퇴사·이직 가장고민 (KB금융, '19년)
- * "돌봄공백 메운 '학원 뽕뽕이'...학생 줄어도 사교육비 늘었다" (서울신문, '23.3.8.)

-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가장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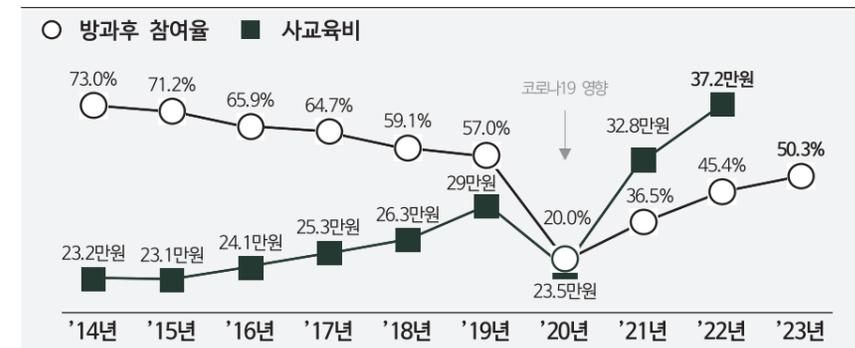
- * 초등돌봄 선호기관 : 학교돌봄(81.4%), 지역돌봄기관(14~16%) (교육부, '23년)

3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 저출생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코로나19 기간 제외)

- * 아이를 더 낳으려 하지 않는 이유 : (1위) 양육비부담(53.1%) (2위)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21.1%) (3위) 건강문제(7.8%) 등 (육아정책연구소, '17년)

-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하락세
'14~'23년, 방과후 참여율과 사교육비(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변화 (교육부, 통계청)



* '22년 총 사교육비 26조원(초 11.9조원, 중 7.1조원, 고 7.0조원)

4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중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 비교

구분	방과후	돌봄
공간	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인력	교원, 외부강사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비용	수익자 부담	무료
이용방식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1~5시)

- 공간 등이 달라 같은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 돌봄교실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기에 한번 신청·선정되면 오후 내내(주로 1~5시)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대부분

-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직적 구조

시간대별 돌봄교실 퇴실 학생수 <교육부, '23년>

구분	~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	~오후5시
총 이용자	15,434명	79,176명	207,882명	291,959명
30만명중	(5.1%)	(26.3%)	(69.2%)	(97.1%)

-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는 데 한계

* '23년, 전체 일반학급 수(12.6만개) 대비 돌봄교실 수(1.5만개)는 약 12%에 불과

- 돌봄교실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부족으로 신청제한(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및 추첨·탈락·대기자까지 발생중

-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

* '23.3월, 돌봄대기자 1.5만명 발생, 97.9%가 초1(7,830명), 초2(7,182명)

5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필요 → 「늘봄학교」 도입

* '23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 : 늘봄학교 34.8% <교육부, '24년>

* '24년 초1 예비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 늘봄학교 희망 83.6% <교육부, '24년>

- 1 일부만 누리는 방과후·돌봄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필수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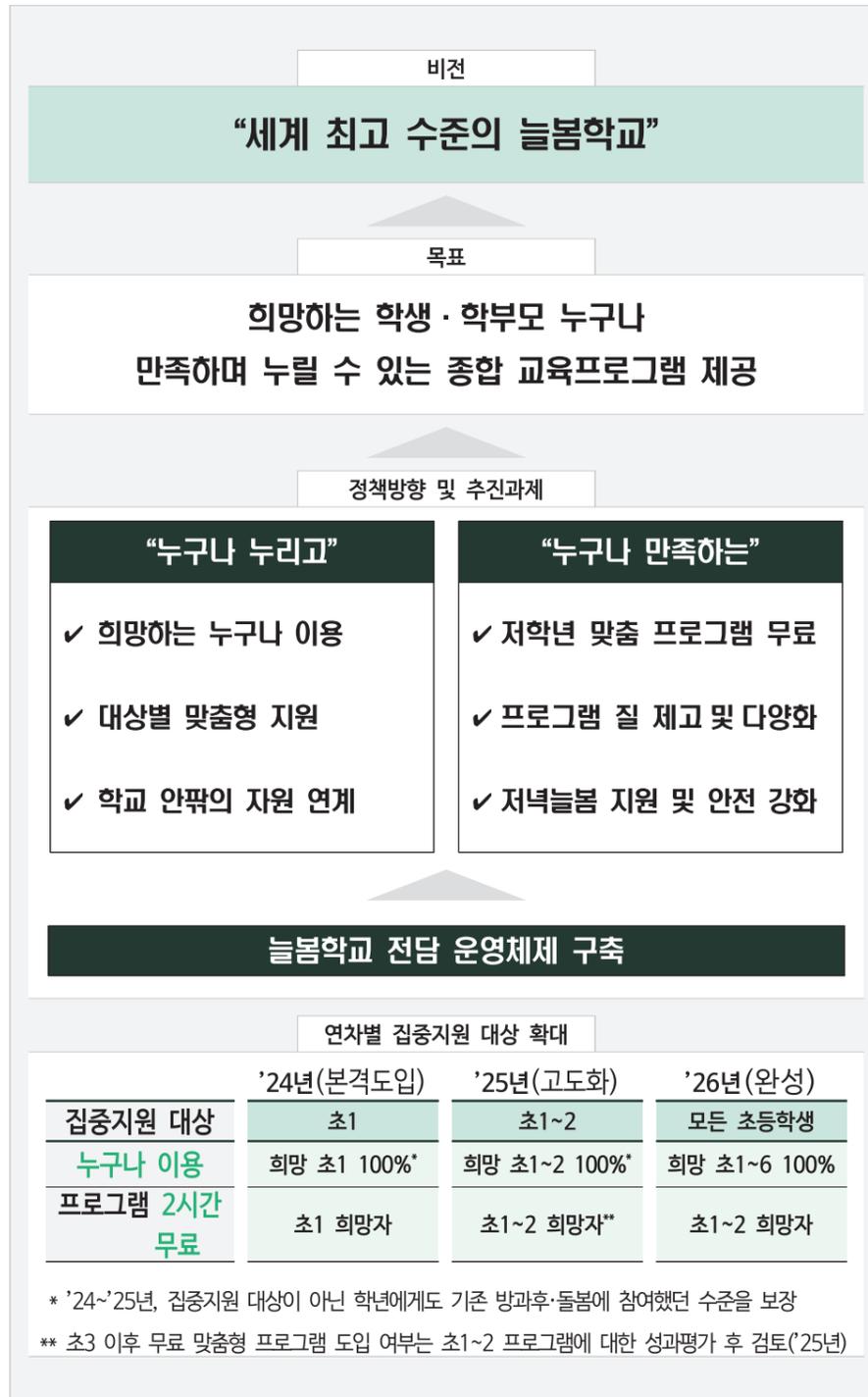
- 2 공간·인력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

*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년>

- 3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필요

* “지역연계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 <서울교대, '23년>

II. 추진방향



III. 추진과제

1.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학생·학부모 누구나 원한다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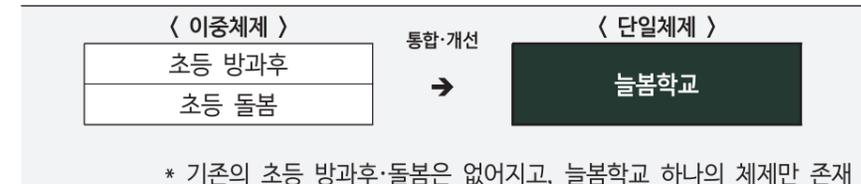
①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예) (기존) 돌봄교실 신청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존재

→ **(개선) '24년 초1은 늘봄학교(기존 방과후·돌봄 포함)는 입학기준 없음**

'24년부터 초등 방과후·돌봄 이중체제 통합·개선 →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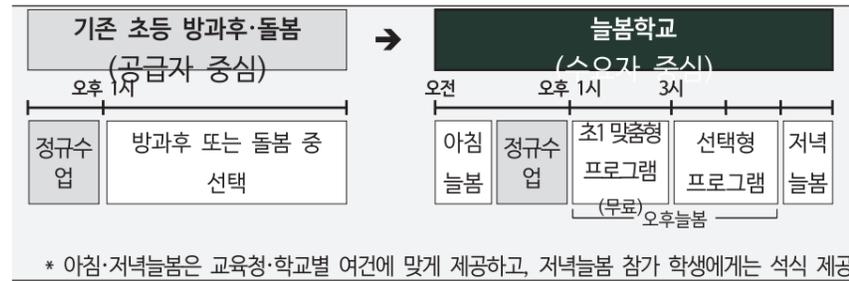
- '24년에는 초등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누구나 이용'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이용수준을 지원

-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또는 돌봄 중 선택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의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시] '24년 초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 늘봄학교는 '24년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을 우선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23년기준, 6,175개교)에서 운영
- 운영시간은 기존 방과후·돌봄(오후1~5시 중심)보다 연장하여,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8시) 확대
- * 학생·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맞추어, 기존 방과후·돌봄의 운영체계, 용어, 인프라 등을 '늘봄'으로 브랜드 통합
- * '늘봄' 브랜드 통합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추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늘봄' 브랜드 통합

구분	지금까지	앞으로
체제	초등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 늘봄학교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 늘봄과정
공간	방과후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 늘봄프로그램교실 늘봄교실
인력	(신설) (신설)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 늘봄지원실장(공무원) 늘봄실무직원(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늘봄전담사(공무직) * 돌봄전담사 노조와 협의추진 늘봄프로그램강사(계약직)
프로그램	초1 에듀케어 (신설)	→ (삭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 ('24년) 초1 → ('25년~) 초1~2
조직	학교 (신설)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센터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학교 늘봄지원실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 교육부·교육청별 자체 수요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개선 지속 추진
- * '24학년도 초1학년 예비학부모 대상 전수 수요조사 실시(교육부, '24.1.1.~1.8.)

2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

-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3년, 177개교)도 지원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시(늘봄지원실 설치, 늘봄 전담인력 배치 등),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포함하여 추진

초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교육부, ’23년>

구분	학생 수(명)			
	초1	초2~6	계	
일반학교	일반학급	1,465	7,123	8,588
	특수학급	5,027	28,094	33,121
특수학교	1,650	8,226	9,876	
계	8,142	43,443	51,585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대한장애인체육회(뉴스포츠), 사피엔스 4.0(SW교육),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 등

** 운영학교 수(개교) : (’24년) 50 → (’25년) 100 → (’26년) 200 → (’27년) 300

-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

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이주배경학생 】

- 늘봄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및 기초 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 30개교)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대학생 멘토수 : (’23년) 4,000명 → (’24년) 8,000명

-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원적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규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집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위탁교육과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늘봄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집중캠프 등 운영

- 늘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이주배경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가족단위 교류기회 등 확대

* 예)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문화 교육, 교육과정 바로알기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 도입**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중이며, 1인당 年60~80만원 지원

- (대상) 저소득층 외 학교장추천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청·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 확대·다양화

* (기존)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10% → (개선)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20%

- (사용처) 간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및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예)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한 늘봄학교 운영시, 해당기관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③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교육청·학교별 여건·특성에 맞게 추진

❖ 학교 공간 확충 및 수요에 맞는 탄력적 활용을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학교 밖 다양한 교육자원 적극 활용

【 학교 안 】

- (공간 확충·개선)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확충*, 학교공간 리모델링(아동친화적 교실환경**), 모듈러교실 설치 등 추진

* 늘봄교실 수(실) : ('22년) 14,970 → ('23년) 15,147 → ('24년^{목표}) 15,347

**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놀이·쉼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제주] 모듈러를 설치하여 학교 내 공간부족 문제 해소

- (기존공간 활용) 늘봄과정(기존, 방과후 및 돌봄)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탄력적 활용

[대전] 특별실 등 활용 1~2학년 대상 한시적인 '보듬교실' 운영

- 일반교실의 겸용교실 활용을 위해, 교사 연구실 확충, 아동친

화적으로 초1 교실환경 구성, 학급운영비 확대* 등 지원

* 일반교실을 개방한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 연구비, 학급 청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기존의 학급운영비에 '추가하여' 지원(특별교부금)

[강원] 일반교실 제공 교원에게 비품구입비(컴퓨터 구입 등) 실당 5백만원 지원

- (효율적 운영) 학생의 공간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공간활용을 시간대별로 효율화하고 공간 재배치 추진(학교별)

[경기] 학생별 돌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맞춤형 공간 제공

- (늘봄교실 학생수 자율화)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1개 실당 학생수를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

* (기존) 늘봄교실당 학생수 20명 내외 → (개선)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 학교 밖 】

- (거점형 늘봄센터) 인근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수요 흡수를 위한 거점형 센터 신축 또는 지정·운영('23년, 7개)

[인천, 경남]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운영하여, 인근 학교 늘봄수요 공동 대응

- (대학) 대학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위탁

[강원] 강원도 원주대학에 위탁하여 돌봄프로그램 등 운영('24년, 6실 개원)

- (지자체) 아파트단지 내 공간,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 지자체의 다양한 공간을 늘봄학교와 연계·활용

[부산] 부산시와 협력하여 도서관, 사회체육센터, 복지공간,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대구] '늘봄형 공공도서관' 운영, 3~5학년 50여명 20시까지 지원

[전북]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활용한 학교 밖 운영 지원

[전남] 아파트단지 내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여 연계

[경북] 마을밀착형 '굿센스' 운영 확대(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위탁)

[제주] 지자체 연계 주말돌봄센터 '꿈냥' 운영

-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교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늘봄협의체' 활용**

* 기존의 초등돌봄협의체('22년기준, 광역단위 14개, 기초단위 167개)를 (가칭) '지역늘봄협의체'로 전환·운영 추진

○ (지역기관) 지역의 방과후·돌봄기관* 등과 연계·협력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4,2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95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350개소) 등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협력

[울산]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광주]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 등 30개 기관 연계망 구축 추진, '온마을 다⁺봄터' 민간위탁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여,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확산 추진

[충북]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충북교육청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 (인력활용) 퇴직교원, 실버인력, 교수, 대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인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 활용**

* 예비교원,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생, 다양한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추진

[서울] 서울시 도봉구청 '도봉 방(과후) 굿(good)' 운영, 도봉구에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장관리 등 지원

【 법적근거 마련 】

○ **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추진('24년 하반기)

2.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①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제공

❖ 초1학년('24년~) 및 초2학년('25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이내 무료 제공하고, **교육부·교육청 중심 강사섭외 지원**

○ (초1 무료 맞춤형) '24년, 희망하는 초1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무료제공

* (예비학부모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희망 응답률) 92.7% <교육부, '24년>

*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계획 : ('24년) 초1 → ('25년~) 초1~2

* 초3~6학년까지 무상 프로그램 도입여부는 초1~2학년 운영 성과평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에 결정

-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같은 시간**

다른 놀봄과정(돌봄서비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

[예시] 놀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차시 40분, 10분 휴식)

적응기 (3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2:00	정규수업				
	12:00~13:10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놀이한글	방송댄스	놀이체육	놀이미술
	13:50~14:00	심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마음일기	놀이수학	음악즐넘기	놀이과학

자람기 (4월~)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3:10	정규수업 →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음악	정규수업	창의·수학	정규수업	독서토론
	13:50~14:00	심과 휴식				
	14:00~14:40	놀이체육	창의과학	인성·독서	마음일기	창의미술
	14:40~14:50	심과 휴식				
	14:50~15:30	놀봄과정 (돌봄)	놀이한글	놀봄과정 (프로그램)	놀이체육	놀봄과정 (돌봄)

-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초1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을 학교여건에 맞게 제공
- 지역대학 중심의 사업단(24년, 33개)을 공모하여, 질 높은 놀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제공(24.2~7월)
- 학생·학부모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 집중개발·제공

놀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분야

체육	운동과 체력, 건강한 생활습관, 안전한 활동, 스포츠 유형과 표현 등
문화·예술	음악 연주와 감상, 미적 체험과 표현, 문예 창작, 연극, 영화·사진 등
사회·정서	사회와 언어, 건강과 안전, 명상, 마음일기 등
창의·과학	AI·디지털, 기술과 생활, 지구와 우주, 과학과 사회, 수학적 사고 등
기후·환경	생태, 기후위기, 기후행동,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

- (강사섭외)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 지원

* 외부강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은 강사로 참여 가능

- (강사비) 시간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은 시간당 4만원 단가로 책정하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에 산 추가하여 편성 가능 /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사업비(교육부, 교육청 등)은 통합하여 놀봄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인력풀)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

* 예) 농어촌학교 대상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에서 확보한 문화예술교육강사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관련 기관별 역할(안)

교육부	• 중앙단위 프로그램 우수공급처 발굴 및 업무협약 등 추진 •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 연계·협력
교육(지원)청	• 학교대상 수요조사 및 강사 인력풀 마련, 강사섭외, 매칭 지원 • 강사연수 및 강사료지급·수강료환불 등 학교 회계업무 지원
학교	• 강사수요 제출(→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운영공간 제공 등

② 놀봄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 지자체, 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처 개방화

【 프로그램 우수공급처 확대 】

- (지자체)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유적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등과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경험* 지원

* 초등 고학년의 경우, 안전관리 등 보장된 조건하에 학교 밖으로 이동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경험 활동 지원

- **(지역대학)** 대학의 우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예·체능, AI·디지털 등) 제공

[부산] 동의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펜싱, 드론, AI·SW, chatGPT 대화교실 프로그램 등을 제공

[세종] 인근대학, 연구단지 등 세종시 교육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

[경기] 경인교대와 연계하여 대학생이 인근 초등학교 대상으로 AI 튜터 등을 활용해 방과후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충남] 지역대학 연계 '에듀테크 SW 혼합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7개 대학, 23개 프로그램 운영)

- **(단체·협회)** 예·체능(축구, 야구, 태권도 등), 디지털(드론), 경제(금융교육) 등 다방면의 단체·협회와 연계·협력 추진

* '24년 1월, 교육부와 43개 기관·단체 MOU체결(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등)

- **(기업·언론사 등)** 늘봄학교와 기업, 언론사 등이 보유한 특화형 프로그램* 연계 및 기업의 교육 사회공헌** 활용

* 예) IT기업의 디지털 교육, 언론사의 글쓰기 교육, 경제·금융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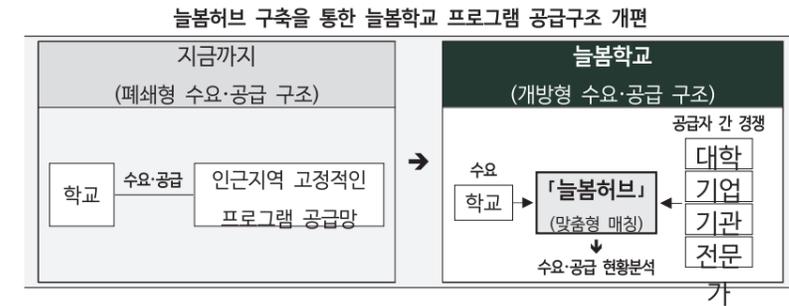
** 교육부 교육기부와 늘봄학교 연계, 기관·대학·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프로그램 지원

[언론사]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부-MBN 간 MOU체결

[기업] SK는 교육청, 일반지자체 등과 '행복한 학교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중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늘봄허브') 구축('24년 하반기 개통)
- 대학,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운영



- (가칭)'늘봄허브'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공급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해소 지원

【 여타 사업과 연계·협력 】

- **(체육·예술 프로그램)** 학생 체육·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활용하여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 초등학교 체육동아리 운영 : ('23년) 2,854개교 → ('24년) 6,000개교 예정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 ('23년) 598개교 → ('24년) 700개교 예정

- **(AI·디지털 프로그램)** 학생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 새싹' 사업*을 늘봄학교에 우선지원

* '23년, 3,864개교에서 운영하였으며, '24년 참여학생 21만명 목표로 추진

- **(진로체험)**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

* '23년, 전국 218개 진로체험지원센터, 약 11,490개 진로체험기관 운영중
저학년의 경우, 학교 내로 강사 등이 찾아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학년의 경우, 안전한 이동하에 학교 밖 진로체험기관 프로그램에 참여

- (기초학력)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

3.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늘봄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

【 저녁늘봄 석식비 지원 】

- 학기중 불가피하게 저녁시간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식비 전액지원('23년 기준, 약 8,562명)

오후5~8시까지 시간대별 돌봄참여 학생 수(명) <교육부, '23년>

계	~18:00	~18:30	~19:00	~19:30	~20:00
8,562	6,350	1,171	738	100	203

【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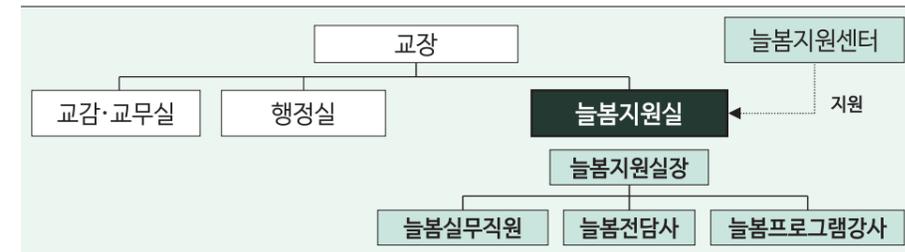
- (늘봄학교 맞춤형) 학교 안팎으로의 이동이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맞게 안전관리 강화 추진
 - *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은 연초에 늘봄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 차년도 안전계획에 반영
- (학교 밖 안전) 거점형 늘봄학교, 지역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통학버스 등 지원
 - * 학교 밖 이동시, 늘봄학교 안전인력 인솔하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동

- (안전인력)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늘봄 안전인력을 채용·배치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인력 등을 활용
- (안전시스템)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CCTV·비상벨·인터폰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장치 등 보강

3.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1. '25년 최종완성 :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 위 도표를 기본모형으로 하되, 시도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25년, 초등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전담 행정인력(공무원, 공무원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배치
 - * 교사는 더 이상 방과후·돌봄 행정업무를 맡지 않으며,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부담 해소
 - (늘봄지원실장)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 전임발령,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
 - *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늘봄실무직원*)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직, 단

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배치

* 구체적인 직종 명칭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늘봄전담사 및 늘봄프로그램강사) 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명칭 변경* 및 필요에 따라 기존업무 추가·변경

* 돌봄전담사에서 늘봄전담사로의 명칭변경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추진

늘봄지원실 구성 및 구성원 역할

구성원	구분	역할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늘봄지원실 업무 책임
늘봄실무직원	공무원, 공무원,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행정업무 전담*
늘봄전담사	공무직	기존 돌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강사	외부강사 또는 교사	기존 방과후강사

*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2 '24~'25년 추진 로드맵

구분	과도기단계		최종완성
	① '24년 1학기	② '24년 2학기	③ '25년
늘봄지원실	설치 추진	1교1실 설치·운영	1교1실 설치·운영
늘봄지원실장	공무원*, 교감 *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교감 * 늘봄지원센터 소속	지방공무원*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 큰 학교에 전임발령
늘봄실무직원	늘봄 신규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 신규업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교사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	늘봄실무직원 등에게 방과후·돌봄 업무 이관	
		↑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늘봄지원실 전담체제 완성

① ('24년 1학기) 늘봄학교 신규업무에서 교사 업무부담 해소

-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방과후·돌봄 업무는 맡지만, 늘봄학교 신규업무 부담에서는 해소

*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원 2,250명 등 배정

② ('24년 2학기) 늘봄실무직원이 늘봄학교 행정업무 전담

- 늘봄실무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원*,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배치(~'24.1학기말 완료)

* 국가 정책수요로 늘봄학교 관련 공무직 신설하고, 시도교육청별 수요를 받아 배치

-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하고, 교사에게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늘봄지원실로 이관

③ ('25년)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완성

-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큰 학교, 2,500명내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늘봄학교 전담조직·인력 운영

* '25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증원 추진

IV.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	→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small>*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small>	→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small>*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초1~6학년 100%</small>
이용 시간	오후 1~5시까지 중심 <small>*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small>	→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8시)
비용	프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small>*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small>	→	프로그램 비용 무료 <small>*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small>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small>*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small>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 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small>*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small>

붙임1 소요 예산(안)

❖ '24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최소 총 1조1,657억 소요(특교 2,469억, 보통 9,188억) 전년 대비 4,672억 이상 증액

구분	'23년	계	'24년		'24-'23 비교
			기 편성	추가 필요 (최소)	
특교	1,109	2,841	1,800	1,041	+1,732
전체					
< 늘봄학교 관련 >					
- 늘봄학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늘봄교실 석식비 등	837	2,469	1,469	1,000	+1,632
< 늘봄학교 외 >					
-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거점형 돌봄 모델 개발, 위탁사업비	272	372	331	41	+100
보통	7,620	10,815	7,815	3,000	+3,195
전체					
< 늘봄학교 관련(초등) >					
-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초등돌봄 지원	6,148	9,188	6,188	3,000	+3,040
< 늘봄학교 외(중등) >					
-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수강권	1,472	1,627	1,627	-	+155
합계(전체)	8,729	13,656	9,615	4,041	+4,927
합계(늘봄학교 관련)	6,985	11,657	7,657	4,000	+4,672

※ '추가 필요'는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금액 이상으로 확보 가능

※ 늘봄실무직원(기간제교원 포함), 늘봄전담사(기존 돌봄전담사) 등 인건비 별도 지원(보통교부금에 포함)

붙임2 '24학년도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24년 교육부 주관, 초1 예비학부모 대상 늘봄학교 관련 전수조사 개요

- (목적) 2024년 늘봄학교 운영 준비에 참고할 기초데이터 수집·이용
- (대상) 2024학년도 초등1학년 입학예정 학생(약34만명)의 학부모 1명
- (기간) 2024.1.1.(월) ~ 2024.1.8.(월) (7일간)
- (방법) 온라인 조사

□ 응답자 현황

- '24년 초1 예비학부모(1인) 약 34만명 중 52,655명 참여(15.4%)

□ 주요 조사결과

- (참여희망) 전체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희망(44,035명)
 - 그 외 응답으로는 가정돌봄(8.0%), 학원수강(6.4%), 기타(1.2%), 친지 돌봄(0.8%) 순
- (희망시간) 정규수업 이후 ~오후4시(29.8%) > ~오후3시(25.4%) > ~오후5시(19.5%) > ~오후2시(11.6%) > ~오후8시(1.2%) 순

늘봄학교 참여 희망시간

구분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계
응답자(명)	5,124	11,180	13,122	8,592	3,850	1,658	509	44,035
비율(%)	11.6	25.4	29.8	19.5	8.7	3.8	1.2	100

- (희망활동) 초1 맞춤형 프로그램+선택(방과후,돌봄)(81.0%) > 초1 맞춤형 프로그램만(11.7%) > 방과후 프로그램만(5.1%) > 돌봄만(2.1%) 순
- (선호프로그램)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기타(0.8%) 순 (1순위 응답)

학부모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체육	18,344	44.9	10,600	26.0	7,010	17.2	4,618	11.3
문화·예술	16,052	39.3	17,258	42.3	5,872	14.4	1,595	3.9
디지털	1,949	4.8	5,632	13.8	13,980	34.2	18,080	44.3
심리·정서	4,160	10.2	7,082	17.3	13,599	33.3	15,285	37.4
기타	324	0.8	257	0.6	368	0.9	1,251	3.1
전체	40,829	100	40,829	100	40,829	100	40,829	100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늘봄, 이대로 괜찮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늘봄, 이대로 괜찮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김한민

아이를 낳고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어렵다. 매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 나라 출생률(23년 0.72명)만 봐도 그렇다. 1950년 전쟁 중에도 63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3만 명 정도다. 어쩌면 지금이 전쟁보다 아이 낳기 더 어려운 환경일지도 모른다.¹⁾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큰다는 말은 외계어가 된 지 오래다. 웬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으면 출산, 돌봄, 교육은 이제 개인(사적 영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다. 금, 은수저가 아닌 이상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지 않으면 비루한 삶을 살 게 뻔히 보이는데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이를 위한 치열한 비용 경쟁이 가능해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출산 거부다. 지금의 출산률은 지극히 합리적인 사회적, 집단적 선택의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면 출산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에 지난 20년 280조를 쏟아붓고도 출산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개인들의 선택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니,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인들이 출산이라는 불합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리 없다.

출산 거부는 정치권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 개혁에 대한 청년 민중들의 교육지책이다. 학력과 학벌, 성별로 인한 극심한 소득 격차, 이로 인한 미친 대학입시 전쟁,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비용, 기후 위기까지. 이런 사회는 내 아이가 자라나서도 바꾸기 어렵고, 되물려 주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경쟁을 줄이는 방법, 주거비를 낮추고 기후 위기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바로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려는 의도가 분명한, “부모가 원하

1) 49년에 실시한 인구총조사에서 남측만 2,016만명 정도였음. 51년 67만명, 60년 108만명, 70년 100만명, 80년 86만, 2000년 63만, 11년 47만, 18년 32만, 20년 27만 명이 태어났음.

기만 하면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다” 는 윤석열 - 이주호가 밀어붙이고 있는 ‘늘봄’. 초등 학령기 아이들에 대한 돌봄 정책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얼핏 보면, 좌파 정치 세력의 포퓰리즘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를 칠 법도 했을 보수 언론들도 칭찬 일색이다. 좌파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인구감소로 나라가 망하는 걸 더 걱정하는 건가? 뭐가 되었던 공적 돌봄의 확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방향은 맞다. 보육에 드는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덜어 주는 것은 맞는 일이다.

전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전사회적 차원에서 질문과 답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략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돌보면 되고 누가 돌볼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제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상 실험을 하나 해본다. 만약 부모 등 보호자가 주로 돌보게 하자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하려면 당장 보호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엔 마을에서 주로 돌보게 하자 한다면, 지자체의 어린이 돌봄 체계에 대한 점검과 돌봄 수요를 충족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협의, 합의해야 한다. 학교가 그 역할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학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검토할 수도 있다.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첫단추를 잘못 끼울 경우 감당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라도 무척 신중해야 한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Ganztagsschule: GTS)도 20년 정도의 논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마음이 급했다. 급해도 너무 급했다, 여전 급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너무 힘들어요, 울음 터뜨린 초등학교 1학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4년 1월,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늘봄’²⁾ 당장 시행이라는 깜짝 선언을 했다. 갑자기 원래 계획보다 일 년 당겨졌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 25년엔

2학년까지 확대. 그 다음 해에는 초등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시도교육청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난리가 났다. 교육부가 그냥 정하고 밀어붙였다. 학교는 물론이고 돌봄 당사자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돌봄의 주체는 학교, 재원 마련은 글썄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늘봄 정책.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돌봄 시간은 최장 13시간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많지는 않다. 어른들도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몇 시간이고 있는 것이 힘든데 어떤 아이들은 아침 7시에 학교에 와서 밤 8시에 집에 간다. (물론 이런 아이들은 얼마 없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강원도에서 급하게 지정한 늘봄 시범학교에 입학한 1학년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울며 집에 가고 싶다고 한 사례를 신문을 통해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말이 늘봄이지 아이와 보호자(부모) 모두에게 우리 사회의 잔혹한 단면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형 늘봄학교는 모두에게 가혹하다. 서울에서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잔뜩 기대해서 늘봄을 신청했는데, 수업 시간의 연장인 것을 확인하고는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계속 보고 되고 있다. 아이를 맡기는 정책과 함께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

기대와 달리 돌봄은 제공되지 않다 보니 늘봄교실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A초등학교 교감: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보다는 아이들 숫자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갓 입학한 1학년에게 정규수업 후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피로를 호소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니 다.
[B초등학교 교사: "5교시 하는 날에도 2시간 수업(맞춤 프로그램)을 하고 가면 아이들이 7교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7교시를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학교는 즐거운 곳,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기 싫은 곳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그림 1 헬로TV뉴스, 2024.5.22 방송

단지 하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제공이 늘봄 정책의 시작과 끝.

2) 늘 본다. 늘 따뜻한 돌과 같은 돌봄이란 뜻. 2021년 경남 도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이름이고, 이를 교육부가 사용.

초등학교 1~2학년들은 1주일에 22~23시간 수업을 한다. 4교시에 끝나는 날이 있고 5교시에 끝나는 날이 있다. 수업이 끝나면 네 그룹으로 나뉜다. 집으로 가는 경우, 돌봄 교실로 가는 경우, 학원으로 가는 경우, 학교 방과후 교실로 가는 경우. 4교시가 있는 날은 점심 먹고 학교 방과후 교실 또는 학원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빈다.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거나 방과후 교실 앞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친구들과 핸드폰 게임을 하며 기다리기도 한다. 일주일 동안에 4교시가 있는 날이 생기는 그 1시간이 틈새 돌봄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간이다.

이번 교육부의 늘봄(돌봄) 정책은 간단하다. 기존 학교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³⁾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모든 초등 학생에게 하루 2시간씩(1주일에 10시간) 무료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의문이 든다. 학교 방과후 교실 2시간 무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리려고 그 난리를 쳤나? 다만, 강사비가 다르다. 1시간당 4만원. 현재 방과후 강사들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루 1~2시간, 이 강사비로 예체능, 놀이 프로그램을 질 높게 운영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다수 교육청에서 6~8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 그리고 틈새 돌봄이 문제라면 10시간이 아니라 2~3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10시간을? 다다익선인가? 그도 아니면 강사로 4만원에 운영하는 늘봄과 현재 수익자 부담 방과후 교실과 프로그램 질을 놓고 한판 붙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료라서 좋은데, 이 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고물가(?) 시대에 힘겨워 보인다. 전 강민정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경우 초1 늘봄(초1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외부강사가 2,906명명인데 교원수도 2,097명이나 된다.⁴⁾ 강사로 인상이 없으면 교사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방과후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통 분담을 하거나.

3) 학교 방과후는 학교가 이리 저리한 강좌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함. 서울의 경우 70% 정도는 방과후 교실 전체를 사설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30% 정도는 학교가 직접 강좌 개설 및 강사 섭외, 운영 등을 하고 있음. 돌봄 교실은 정규 수업 후에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맡아 주고 있고 수요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기존 교원이 늘봄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교조가 조사한 초등학교 661개교(전체 늘봄학교 중 22%) 중 53.7%에서 교사(정교사·기간제)를 투입하고 있었다. 특히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교감·정교사·기간제)이 떠맡는 경우는 89.2%에 달했다. 8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150개 시범실시학교에서는 강사로 교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20%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나.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및 구성

-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이용 유형(예시)

〈표 Ⅲ-1〉 늘봄학교 시간대별 이용 유형(예시)

늘봄학교 시간대별 이용 유형								
구분	7: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20:00	
1 학년	아침 늘봄	오후늘봄						저녁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 하교						
		맞춤형 프로그램 → 늘봄교실 → 하교						
		늘봄교실 (※기존 돌봄) → 하교						
		맞춤형 프로그램 → 늘봄교실&늘봄(방과후) 프로그램 → 하교						
		맞춤형 프로그램 →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 하교						
		연계형늘봄 &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 하교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 기존 방과후) → 하교								

〈표 Ⅲ-2〉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및 늘봄과정(1~6학년) 구성(예시)

구분	시정	월	화	수	목	금	
1 학년	적응기 (3월) 무상	09:00-12:00	정규수업(3교시 기준)				
		12:00-13:10	점심시간 및 자유놀이·휴식				
		13:10-13:50	놀이수학	방송댄스	인성독서	방송댄스	창의미술
	자람기 (4월~) 무상	13:50-14:00	휴식				
		14:00-14:40	놀이한글	창의놀이	보드게임	악기놀이	창의미술
		09:00-13:10	정규수업(3교시 기준) → 점심 → 자유놀이·휴식				
		13:20-14:00	놀이수학	(5교시)	(5교시)	(5교시)	정보교실
14:10-14:40	놀이한글	창의과학	창의수학	한글놀이	어린이코딩		
14:50-15:30	북아트	놀이체육	인성·논술	놀이미술	코딩교육		
2~6 학년	성장기 (3월~)	14:40-15:20	환경교육	키즈요가	창의과학	수채화 (저학년)	컴퓨터활용교육
		15:20-16:00	환경교육 (고학년)	키즈요가	드론교육 (고학년)	수채화 (고학년)	축구교실 (저/고학년)
		16:10-16:50	창의한자 <지역연계>	창의한자	창의바둑	창의바둑	창의바둑 <민간연계>

↓

*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활동 1시간 + 교육청/자치단체 지원 활동시간 1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지역별, 학교별로 자율성을 발휘하여 다양하게 운영 가능
*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지도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그림 2 교육부 늘봄학교 가이드라인(2024)

메뚜기가 된 1학년 담임 선생님들

서울의 경우 현재 시범 실시 학교에서 늘봄 신청 인원은 대략 전체 학생의 50%를 넘고 있다. 예를 들어, 1학년이 4개 반이면 2개 반은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유

휴 교실이 있어서 늘봄 교실을 만들 수 있는 학교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유휴 교실은 돌봄 교실로 쓰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등 과밀학급 지역에서 돌봄 수요도 많은데, 유휴 교실 자체가 없다. 음악실, 미술실 같은 곳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결국 1학년 교실을 늘봄 '겸용 교실'로 써야 한다.

23년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에 25명 이상 과밀학급수는 무려 3,541학급, 28명 이상은 1,584학급, 30명 이상은 797학급이나 된다.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20명 선으로 맞춘다면 현재 학급수 보다 2,084학급이 늘어야 한다. 특히, 과밀학급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는 교실 확보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난망한 현실이다.



그림 3 sbs 뉴스, 2024. 8.13

지난 8월 1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늘봄 교실로 466학교 809교실, 교사 연구실 242개교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 공사한 학교가 절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나머지 절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걸 1~2학년 용이다. 26년 전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과밀학급 지역에서는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기 교실을 주말 동안 외부 시험에 교사장으로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책상 줄 맞추는 것부터 청소, 학생들 책과 물건 등 신경을 많이 쓴다. '월요일에 제 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부터 쓰레기통까지.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라. 같은 집에 다른 두 가족이 함께 산다. 하나의 활동을 위해 벽면에 붙어 있는 아이들 작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선에 맞는 가구들의 배치, 교실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과 자료들. 초등 1~2학년의 경우는 교실 자체가 하나의 교육 활동 교재다.

당장 2학기부터 늘봄을 위해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을 비워야 한다. 방과후에 학습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기 교실이라는 안정된 공간을 잃어버린다. 선생님이고 아이들 모두 메뚜기가 된다. 방과후 교실도 없어서 방과후 겸용 교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들은 다시 늘봄 겸용 교실까지 내주어야 할 판이다. 수업과 그 수업을 준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로 가지 않겠는가! 보호자(학부모 등)도 이걸 알면 지금 늘봄에 공감할까? 주객 전도다. 공간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하물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40-50년 전 오전반, 오후반이 떠오른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가 모델이었다면,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담당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전일제 학교시설⁵⁾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굉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과밀을 호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과 함께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키움센터와 협력을 모색하는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인력만으로는 이런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점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어떨까?

올해 초 정부는 1조 1657조를 투입해 전국 6,100개의 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물론 이 돈의 출처는 불분명하다. 본 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5) 전일제 교육은 학교와 지자체가 오후 3~5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학교 전교생(216명)이 1명도 빠짐없이 전일제 교육을 이용한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1~2시쯤 두 블록 걸어서 전일제 교육시설(본시 소유)로 이동한다. 시와 위탁계약을 한 보육교사(전일제 전담교사) 12명, 실습·자원봉사자 25명이 오후 수업을 담당한다. 적지 않은 인원이 투입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08591>

다. 늘봄 정책 추진을 1월 말에 급히 발표하면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아래 교육부 예산 홍보 웹자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늘봄 학교 예산은 시범 추진에 머물렀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예산을 국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⁶⁾ 유보통합 예산, AI디지털교과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늘봄예산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육활동으로 쓰일 예산은 턱없이 줄어들 판이다. 교육복지의 위축, 교육 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늘봄 추진을 위해 6월 추경 예산으로 올린 내역을 보면, 늘봄교실 구축비 880억,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335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이다. 1,374억원이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채용할 임기제 연구사 인건비는 제외다(최소 150억 이상 예상). 늘봄 교실은 바닥 난방 공사를 기본으로 한다. 1교실 당 6,000만원이다. 여기에 메뚜기 교사들을 위한 교사연구실도 만들어야 하고 그 예산은 학교당 3,000만원. 이걸 또 몇 개나 만들어야 할까? 늘봄 교실도 만들 상황도 안 되는데 이걸 또 어디에 만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운동장 한켠에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6만 명 남짓이다. 이 아이들에게 그냥 230만원 정도씩을 방과후 돌봄 비용으로 줄 수 있는 돈이다. 학교로만 보면 서울에 공립 초등학교가 560개 정도 되니 학교당 2억이 넘는 예산이다.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간, 초등 1-2학년 틈새 돌봄(주당 2~3시간)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맞는 정책을 쓰면 될 일이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일은 아니다. 만약, 현재 학교 방과후 교실을 무상으로 돌릴 계획이라면 또 모를까. 여기에 쓰이는 돈만큼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6) 초1 28만명 밤 8시까지 돌봄 현장준비는?, MBC 뉴스, 2024.08.15



그림 4 24년 교육부 예산안, 교육부

정규 수업보다 더 많은 늘봄 교실의 학급당 학생수, 질높은 돌봄 프로그램은 대 국민 사기극.

늘봄 인원은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다. 늘봄 교실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한 반에 몰아 넣어야 한다.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놀이, 예체능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경우 1학년 학급당 학생수 편성 기준은 20명이다.

21명이 되면 한 반이 늘어나는 식이다. 특히, 예체능 활동에 학생수가 그 자체로 활동의 질을 결정한다. 늘봄 교실 편성 기준인 25명을 채우는 곳은 주로 늘봄 수요가 많은 과밀 학급이 주를 이루는 학교가 될 것이고, 교실도 못 만들어 특별교실을 없애는 학교가 뺄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유휴 공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운동장도 없는데 농구 교실, 축구 교실, 마술 교실, 댄스 교실? 교육부가 예를 든 사교육 시장에서는 받지 못하는 질 높은 골프 스포츠 교육은 가 당치도 않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게 눈에 뵈히 보이니 슬그머니 국어, 수학 기초학 력 지도도 가능하다고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두었다. 이러니 총선용 졸속 정책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 늘봄(방과후학교,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표

교시	월	화	수	목	금
5교시 (12:40-13:20)	컴퓨터실	과학실	과학실	피아노실	피아노실
6교시 (13:25-14:05)		피아노3	컴퓨터실	과학실	과학실
7교시 (14:10-14:50)	코딩4	늘봄 점핑 클레이 (1,2)	피아노4	늘봄 창의미술 (1,2)	영어 맞춤형 프로그램5
8교시 (14:55-15:35)	코딩 (5-6)	늘봄 점핑 클레이 (1,3)	공예4 연계형 선택	피아노5	늘봄 창의미술 (1,3)
하교					

<학생 수>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7명/ 4학년 8명/ 5학년 7명/ 6학년 4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영어학습 지원 프로그램	늘봄 실무사 활용 프로그램	세대공감 골프 수업
------------	---------	---------------------	----------------	------------

그림 5 00초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간표(24년 3월)

위 00초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초등학교 1학년 이 6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북적되는 교실에서 얼마나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강원도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힘겨움

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쉽고 놀이는 언제 주어지는지 물어야 한다. 아이들이 정말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놀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까? 많은 아이들이 모일수록 엄격한 규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학생의 인권은 학급당 학생수에 달려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놀봄학교라고 예외일 리는 없다. 숨막히는 수업 같은 시간이 놀봄이라면 아이들은 진짜 학교를 계속 싫어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1~2학년 입장에서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말 이래도 좋은가? 처음 돌봄이 학교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봄이 아니라 수업을 할까 봐 걱정했다. 돌본다는 것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지, 수업의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2022개정교육과정까지, 공교육 과정을 발전시켜 오면서 적정 학습량과 학습 수준, 수업 시간을 가장 민감하게 기준을 세우며 결정해 왔다. 초등 중, 저학년의 경우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소소한 것까지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프로그램 중심의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놀이와 신체활동이라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교육과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등 사전에 얼마나 검토할 것이 많은가? 여전히 답답한 이야기지만 졸속이다. 권력 있는 자의 단순한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게 한다.

놀봄 인력을 두고 벌어지는 쟁점

행정적인 문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인력 문제가 핵심이었다. 방과후 업체에게 놀봄까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놀봄까지 추가로 일을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교사들에게 방과후에 더해 돌봄 업무, 거기다 놀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더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호기롭게도 현재 놀봄, 방과후 업무에 놀봄이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놀봄 실무사를 지원하고(교육공무직) 여기에 더해 지방직 공무원을 적정 규모로 충원해서 놀봄 실장으로 학교 행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정부 부처가 조율이 끝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는 일이니 믿었다. 하지만 믿을 걸 믿었어야 했다. 두경을 열어보니 행안부와 조율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증원 계획은 없었다.

대안은? 6월에 들어서, 시도별로 전체 학교 수의 30~50% 내외에서 임기제 연구사를 현직 교사 중에서 뽑아서 놀봄 실장 역할을 맡기겠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최소 2,5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초등 교사가 줄어드는 것이고 2~3개 학교에 한 명씩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남겨진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업무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 기피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놀봄은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교원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었다. 반대로 교육 단체들은 정서위기 학생들의 증가, 기초학력 지원, 느린 학습자 등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령 인구 감소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일 수 있기에 무작정 교원수를 줄이는 것에 반대해 왔다. 교육부는 놀봄 실장으로 빠져 나간 수만큼 신규교사를 더 뽑겠다고 했지만 정원 자체를 줄이면 공염불이다.7)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다. 원하는 만큼 교원정원을 줄이는 게 부담스웠는데 놀봄이 그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일반 학교 장애 학생 놀봄 학교 지원 정책은 어디에?

정부(교육부)는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놀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고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놀봄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우 반가운 방향이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특수학교 중 국공립이 아니고 사립학교들도 꽤 된다. 현재, 교육부는 사립학교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인력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 특수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놀봄 지원이다. 현재 놀봄은 방과후 프로그램(수익자 부담)과 돌봄

7) 교원 정원을 정하는 것은 통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왔음. 학생수가 줄면 그에 비례해 정원도 줄어들. 학령인구가 감소에 따라 퇴직한 교사만으로는 정원을 줄일 수가 없어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이면서 정원 관리를 해 왔지만 그렇다고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자연스럽게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로 초등 교사들의 숙원이었던 전담교사 비율 확대 등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었음.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선 놀봄 실장으로 교사들을 빼면서 정원 축소도 하고 신규 채용 규모로 생색도 낼 수 있게 됨.

프로그래밍의 통합 체계이다. 그러나 여기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시도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 늘봄학교 정책만 고민하여 내용을 만들고, 정작 일반학교 초등학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41,709명에 대한 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학생들이 늘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할 것인지, 관련한 행정 업무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② 장애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

-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3년, 177개교)도 지원
 -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 구축시(늘봄지원실 설치, 늘봄 전담인력 배치 등),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포함하여 추진

초등학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현황(교육부, '23년)

구분	학생 수(명)			
	초1	초2-6	계	
일반학교	일반학급	1,465	7,123	8,588
	특수학급	5,027	28,094	33,121
특수학교	1,650	8,226	9,876	
계	8,142	43,443	51,585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 촉각·음성자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 대한장애인체육회(뉴스포크), 사피엔스 4.0(SW교육),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게임) 등
 - ** 운영학교 수(개교) : ('24년) 50 → ('25년) 100 → ('26년) 200 → ('27년) 300
-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8 -

그림 6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2024.2

특수교육 대상자를 둔 보호자(학부모)가 늘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학교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가? 학교는 당연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늘봄 프로그램에 신청하 시라고 할 수 있을까? 보호자는 늘봄을 두고도 또 다시 소외감과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 2학년 전면 시행을 두고 시급하게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일이다.

지역 돌봄 체계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나?

모든 돌봄을 학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할까? 학교라는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고 자산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규 교육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들이 거름 장치 없이 들어온다면 사회적으로는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간 마을에서 정착시켜 왔던 돌봄 체계⁸⁾도 있다. 수많은 마을 활동가들의 노력과 지자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작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시민사회, 교육단체, 종교기관, 복지기관 등이 마을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돌보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또한 지역단체와 학교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방과후 교실을 위탁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누구나 인정하듯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이 돌봄 시설이다. 이런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돌봄 체계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학교 사이에 다양한 협업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온 좋은 사례들,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을 끊임없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 중구청의 돌봄 체계, 도봉구와 금천구의 지역 방과후 지원 체계,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GTS)는 사회정책 영역, 방과후돌봄은 여가센터(L'accueil de loisirs), 스웨덴의 프리티즈햄(fritidshem: leisure-time centre, 여가활동센터) 등도 무수한 논의와 시행 착오의 결과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 이주호처럼 감당하지도 못

8) 2023년도 서울시-지자체 돌봄현황.(우리동네키움센터: 248개소(6,600명), 지역아동센터: 456개소(1,515명), 중구형 돌봄교실: 9교(700명), 마을 방과후학교: 22교(자유입출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3개소(875명) [출처:서울시교육청]

할 뚱만 싸질러 놓고 나중에 국민들이 뒤치닥거리를 할 게 뻔한 지금 돌봄 정책 따위는 턱없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재설계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돌봄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시도교육청의 결정권의 폭이 어디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혈세와 교육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나가며 : 더 큰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모든 초등학생들의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을 국가가 약속하겠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다. 그게 학교 방과후 2시간 무료 예체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이런 수준에서 논의를 멈추는 것은 곤란하다. 이왕 저질렀으니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가장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은 무엇일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다.⁹⁾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 마련이다. 유럽을 부러워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도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경북도의 돌봄 조기 퇴근 임금 보전 제도가 화제다. 먼 이야기가 아니다. 한 지자체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더해 직장이 불안정한 보호

9) 아동학대를 일삼는 괴물 같은 가족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경북지역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 받는다.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도는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근로자, 소상공인 등 일하는 부모 조기 퇴근과 휴식 지원 공동체 돌봄 마을과 돌봄 유토피아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출처 : 경북일보 24.5.15일(<http://www.kyongbuk.co.kr>)

자들에 대한 대책도 촘촘하게 추가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수년째 가장 적게 잠을 자고 가장 많은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¹⁰⁾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아이 돌봄의 출발점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왔던 주 4일제도 또한 공공 돌봄의 시각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오래 일하기 위해 아이를 오랜 시간 맡겨 둘게 아니라 보호자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69.2%, 반면 독일은 35.8%, 프랑스 50.2%, 미국도 51% 남짓이다. 학벌, 학력과 직종별, 정규-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이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빠지게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라고 하기에는 좀. 작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 원인을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직종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는 단연 세계 최고다. 이 격차가 벼락 거지의 공포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 비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쟁 비용을 완화하지 않고는 출산이든 돌봄이든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생들의 공적 돌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지역 시민사회, 학교의 역할들도 조율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돌봄 정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겨우 방과후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수강권 제공 정도의 단기 처방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을 두고 질높은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과대거품 광고일 뿐이다.

10) OECD 국가 중 통계 확인할 수 있는 31개국의 시간 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 26개 지표를 통해 수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1점 만점 중 노동시간 영역에서는 0.11점으로 28위를, 가족 시간 보장 영역에서는 0.37점으로 20위를 기록하며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 OECD 평균은 7.4%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18.9%로 조사됐다. (일-생활 균형 시간 보장의 유형화 /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과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61650UB>)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늘봄 학교만 실시 요청합니다.

박진보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늘봄 학교만 실시 요청합니다.

서울화곡초등학교 박진보

1. 교육부 서류대로 하면 늘봄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교육부 늘봄 학교 서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내가 늘봄 학교에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엄청난 지원에 놀랐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도 없는 축구 등 예체능을 지원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아귀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 정서 프로그램까지 지원합니다. 문화 예술 오케스트라까지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정규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봄 학교는 지자체와 지역 단체, 지역 대학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에 인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퇴임 교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게 제 꿈입니다. 또 지원이 더 있습니다. 교사인 제가 업무를 하지 않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한데 늘봄 학교에는 바로 지원 인력을 배치합니다. 현재 학교에 업무지원 인력 1명 추가하는데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에서 아끼고 아껴서 한 명 더 충원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늘봄 학교에서는 강사들이 수업만 하고 모든 행정 업무는 별도 인력이 합니다.

제가 한 번 교육부 “2024년 늘봄 학교 추진방안”(2024.2)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늘봄 학교” 대신에 “초등학교”라고 읽어 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이 초등학교에 지원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제 입맛을 다시면서 행복한 꿈을 꾀 보았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늘봄 학교가 이런 일이 가능하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것을 늘봄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 꿈은 꿈이었을까요? 현재 초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늘봄 학교에서도 지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교육부 “늘봄 학교 추진방안”을 읽으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늘봄 학교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교육부와 이주호 장관에게 감사하겠습니다.

2. 늘봄 학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입니다. 학교가 아닌 “늘봄 학교”

학교에 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설립 기준과 방법에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어야 합

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이 없거나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학교 돌봄”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부수적인 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급식 제공의 목적은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의 위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늘봄 학교”는 돌봄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돌봄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늘봄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이름을 “학교”라고 부는 것이다. 실제 학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공적인 국가 기관에서 법적인 규정이 명확한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부터 적절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3. 돌봄이 없는 늘봄 학교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은 나뉘어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교육과”와 “사회과 교육과”는 다릅니다. 사회 교육과는 사회에서 하는 교육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사회과 교육과”는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다루는 “사회과”, 커리큘럼으로서 사회과목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사회과 교육과 사회 교육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돌봄에서 하는 교육과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고도로 정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역사에서도 100년이 넘는 역사입니다. 돌봄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목적은 교육적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학교에서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 돌봄은 완전히 다른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돌봄은 습과 육체와 정신이 성장하는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은 정교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학생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비고츠키 교육학에서는 “자기 규제”를 발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구분하는 연습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화장실 다녀오라고 하면 이상한 집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최대 목적은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른 일을 마치 같은 일인 것처럼 혼란스럽게 “늘봄 학교”라고 하면서 돌봄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늘봄 학교 기획한 분들이 돌봄에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봄 학교에는 늘 돌보지 않는 활동입니다. “늘봄 학교 추진방안”에는 “쉽”이라는 글자가 5번 나옵니다. 그중에서 표에서 예시로 나온 것이 3번, 계획서 내용 중에서 2번도 아무 맥락 없는 “쉽” 있습니다. “쉽”이라는 말이 나온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글을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4쪽 “[문제] 그러나 돌봄(놀이와 쉽, 정서적 성장)보다는 학습만 늘리는 방향”,

12쪽 “**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놀이·쉼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교육부, “늘봄 학교 추진방안” 2024.2.]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쉼”을 하는 방법과 제도적 장치, 환경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늘봄 학교에서 어떤 돌봄이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4. 보호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공적 돌봄이지 학교에서 돌봄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강력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서 보면 보호자는 “학교에서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에 엄청나게 찬성했습니다. 보호자가 이렇게 찬성한 것을 해석할 때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공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이 필요하다.”, “민간 돌봄 기간보다는 공적인 돌봄 기간이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적으로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욕구를 학교에서 돌봄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학교만큼 공적인 돌봄이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의 욕구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봄 기간으로 이동할 때 안전을 확보해 달라”라는 요구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전한 이동이 확보된다면 그것도 공적인 통제하게 강력한 지원이 있는 지역센터가 있다면 보호자가 학교에서 돌보기를 원할까요? 오히려 공간을 바꿔 주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으로 안전한 돌봄 시스템이 없어서 학교에서 돌봐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정책입원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서 설문한다면 설문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기를 원하는 것도 역시 앞에 논리와 같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수준 높은 교육 받고 양성한 사람이 돌봄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교사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돌봄 수업까지 부담하게 되면 학교 교육도 망가지게 됩니다. 교사에게 수업은 소중한 활동이기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방과후에 다른 수업을 진행하게 열어 놓는 것이 초등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 늘봄이 사교육 대책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늘봄은 사교육 대책일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도 사교육이 있지만 많은 학생이 사교육에 뛰어드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사교육의 목적과 보호자의 욕구와 필요

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교육은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심신이 발달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하는 필요와 욕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좋은 직업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사교육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 특별하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늘봄은 원하는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보편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받는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모든 학생이 탁월한 능력으로 모두 만점을 받는다면 보호자가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모든 학생이 월등한 지적 능력으로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겠지만 보호자는 학생이 일류대학, 일류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사교육은 늘봄 학교 정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출산의 여러 원인 중에서 지나친 교육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늘봄 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쟁교육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쟁교육을 줄이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대학 평준화 무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독일과 같이 고등교육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지 않고 늘봄 학교에 엄청난 재정을 들인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6. 저학년 돌봄에 관한 생각도 없고 고학년 돌봄에 관한 생각은 더 없습니다.

저학년 돌봄도 쉽습니다. 돌봄교실 정원이 몇 명이 될까요? 늘봄 교실에 몇 명을 수용해서 낮잠 잘 공간과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학교를 재건축합니다. 교실, 특별실 빼고 돌봄교실로 3개 교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학년 학생이 수업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턱없는 공간입니다.

고학년 돌봄은 학생 발달에 맞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 추진방안”에는 저학년과 다른 고학년 돌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고학년 돌봄도 저학년처럼 하면 고학년 모두 늘봄 학교 탈출합니다. 현재 이 방안으로는 고학년 늘봄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고학년 학생의 욕구와 필요를 발달단계에 맞게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학년 학생은 학교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더 넓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2학년이 집과 학교, 주변 놀이터에 생활한다면 고학년 학생은 주로 노는 놀이터가 친구 집 근처 놀이터까지 확장됩니다. 활동 범위가 초등학교 학구 전체가 되며 때에 따라서는 옆에 학교 친구들과 학구를 벗어나서 놀기도 합니다.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토 론 문

박민아
구로구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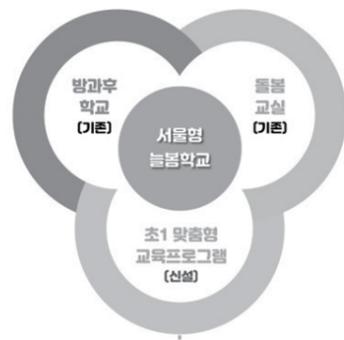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돌봄의 기본권을 명시한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각개전투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라면 공적돌봄 안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늘봄학교에 대해 양육자로서 비판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아동들이 늘봄학교에서 원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권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아동 늘봄학교 정책 방향은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늘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방과후교실에 틈새돌봄과 늘봄이 추가로 들어온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닌, 방과후 돌봄교실 따로, 틈새돌봄 따로, 늘봄교실 따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 심지어 방과후 교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늘봄 교실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양육자와 아동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통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설명도 부족하고 신청부터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양육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현재 돌봄을 받고있는 돌봄프로그램이 방과후돌봄인지, 틈새인지, 늘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정규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과후, 틈새, 늘봄인지는 그 아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프로그램이 2개 인지 양육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면시행된다고 하는 2학기때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로드맵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늘봄학교의 운영체계에서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학교 안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체계에 방과후교실(돌봄, 방과후수업)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그리고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늘봄학교’라고 불리어지는 이 돌봄체계 안에서는 ‘학교’라고 지칭되어지는 만큼 학교안에서 그 역할을 좀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를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운영체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봄교실을 담당하는 담당자,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학교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늘봄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봄학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늘봄학교에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봄학교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지원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늘봄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4)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 등)

- 위촉
 - 위촉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 늘봄학교 봉사 인력 위촉 시 위촉장 수여
 - 근로자 관련 서식(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작성 불필요
- 운영
 - 자원봉사자는 무임금 노동자가 아니며, 인격과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
 - 상하관계의 지시·감독, 활동 상황 보고·결재 금지
 - 고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 지시 금지
 - 자원봉사자는 근무 수칙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가능
 -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
 -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거나 늘봄실무직원 등으로 호칭하여 근로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
 - ※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성 금품(최저임금,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지급 불가
 - ※ 동일 기관에서 여러 영역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중복 불가
- 봉사 인력의 역할(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학생 인솔 및 학교 지도
 - 늘봄프로그램 교실 관리 지원
 - 프로그램 운영 품목 준비 지원
 - 참여 학생 관리 지원

위 자료는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에서 가지고 온 늘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봄 인력에 대해 더 이상 저임금화 하지않길 바랍니다 자원봉사형태나 단기근로의 형태로 돌봄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돌봄에 대해 자원봉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력으로 질 좋은 돌봄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관철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바라보는 늘봄정책.
또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시간제 돌봄부터 해결하라!

임조연

서울동신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바라보는 늘봄정책, 또 다른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시간제 돌봄부터 해결하라!

임조연(서울동신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지난 2월 5일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추진방향을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전 학년에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돌봄교실의 문턱을 전체 초등아동에게 개방하고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이란 명칭으로 2시간 무상 제공하여 전일제 학교를 열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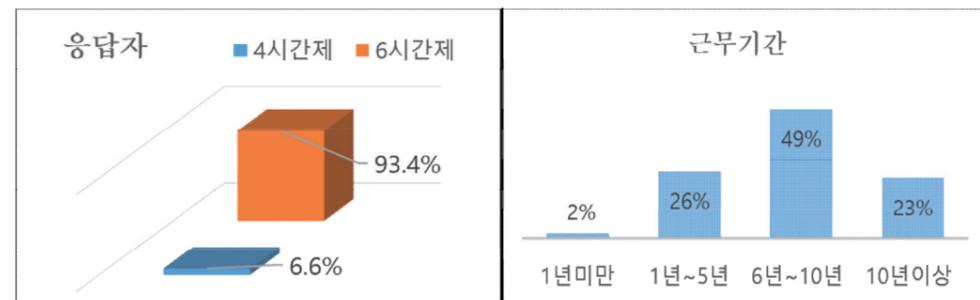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38개 학교를 필두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150여개 학교로 확대하여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7월에는 자격 제한없이 계약직 늘봄실무사를 배치했다. 이렇게 번개불에 콩부어 먹듯 추진된 늘봄정책.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면 초등 1학년 전체 대상으로 전면 시행 한다는 늘봄학교. 우리 초등학교 돌봄현장에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기존 돌봄교실 운영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늘봄' 속에서 기존 돌봄교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돌봄 운영 주체로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1. 늘봄학교 시행, 시간제 돌봄전담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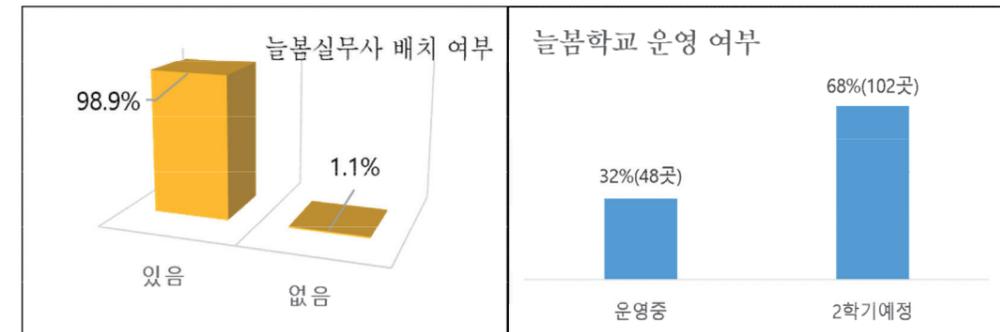
이번 토론회를 맞아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50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196명이 참여하였다. [그림1] 응답자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6시간제 돌봄전담사는 93.4%, 4시간제 돌봄전담사는 6.6%가 응했으며, 응답자 중 근무기간이 6년~10년 근무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23%로 나타났다.

[그림1] 응답자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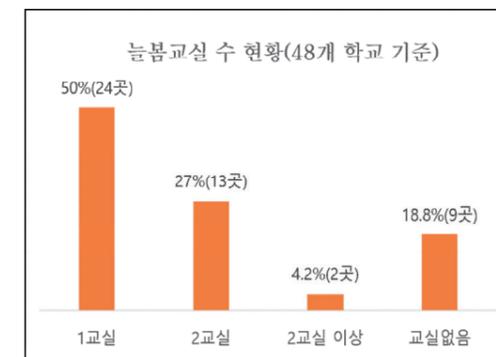
[그림2] 늘봄학교 운영 및 늘봄실무사 배치 현황을 보면, 98.9%가 늘봄실무사가 배치되었다고 응답하였고, 1.1%는 늘봄실무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 근무하는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32%(48곳)는 운영 중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68%(102곳)는 2학기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2] 늘봄학교 운영 및 늘봄실무사 배치 현황



[그림3] 늘봄교실 현황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24곳)는 늘봄운영 교실이 1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늘봄교실이 없는 곳은 18.8%(9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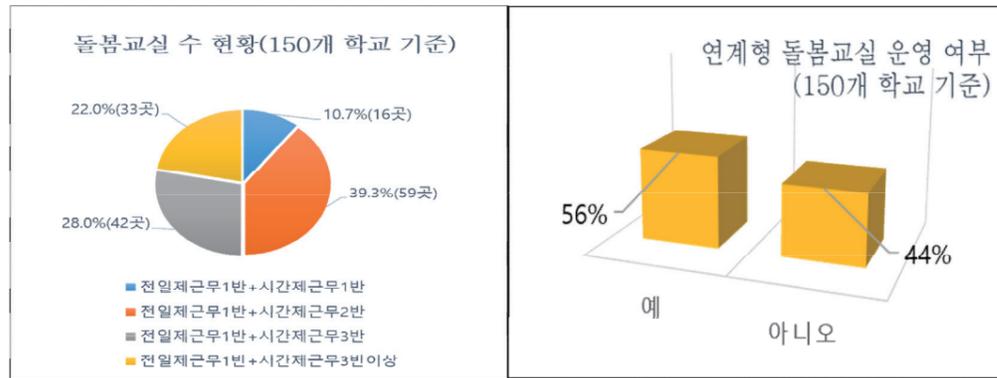
[그림3] 늘봄교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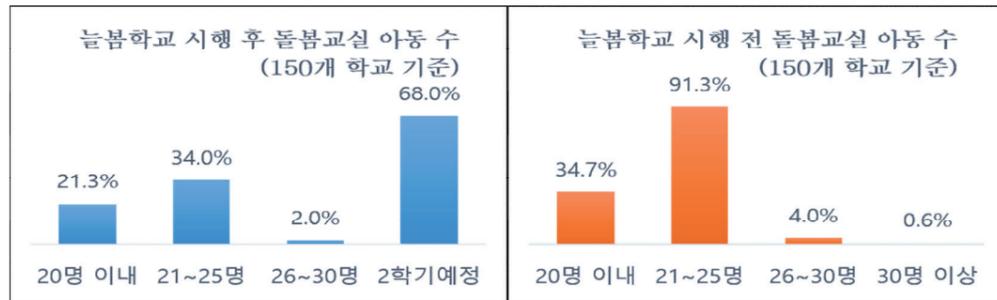
[그림4]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1개반(이하 전일제반)과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이하 시간제반) 2개반으로 운영 중인 학교가 3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6%(84곳)가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5] 늘봄학교 시행 전,후 돌봄교실 참여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전에는 91.3%가 한 돌봄교실에 21-25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행 후에는 응답자 68%가 2학기 전면시행으로 아동 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4] 돌봄교실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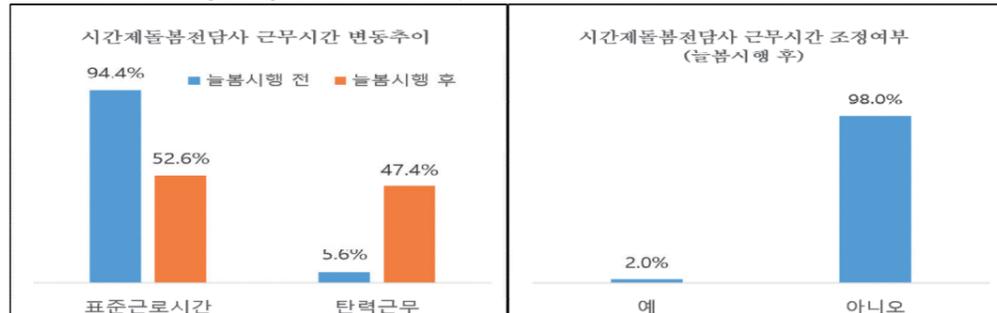


[그림5] 늘봄학교 시행 전후 돌봄교실 참여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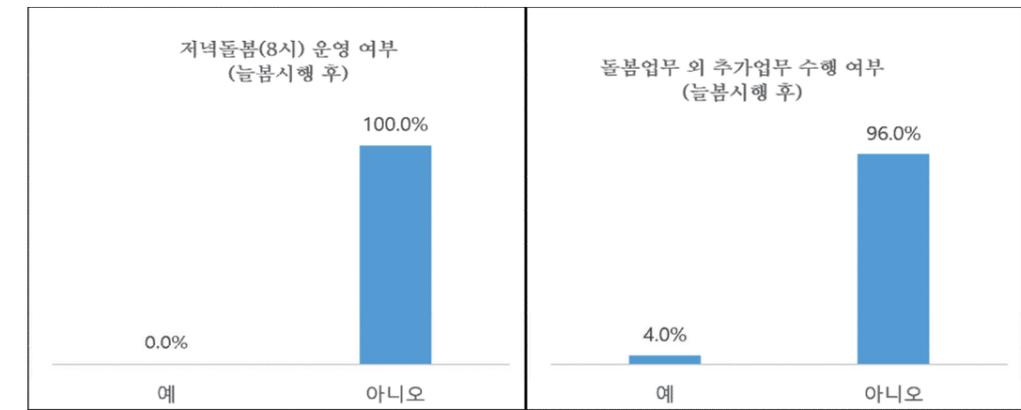
[그림6] 늘봄학교 시행 전,후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현황 응답 결과를 보면, 늘봄학교 시행 후에 표준근로시간(6시간제 경우 13시-19시, 4시간제 경우 13시-17시) 근무가 94.4%에서 52.6%로 41.8% 감소, 탄력근무는 5.6%에서 47.4%로 41.8%가 증가하였다. 늘봄시행 후 학교의 근무시간 조정에 98%가 '아니오'로 나타나 늘봄학교와 상관없이 방학 중 탄력근무가 진행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6] 늘봄학교 시행 전,후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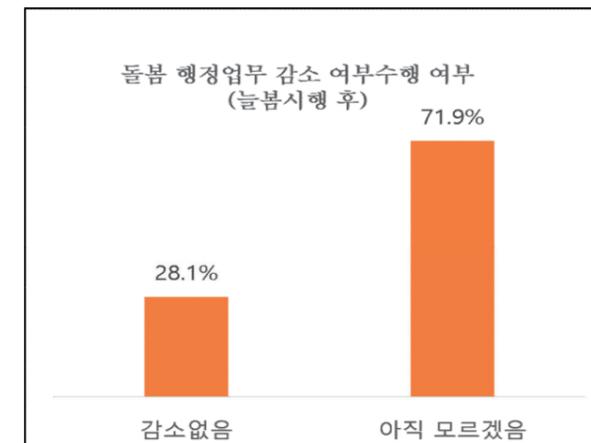
[그림7] 늘봄학교 시행 후 저녁돌봄(8시) 및 돌봄 추가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저녁8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 전원이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으며, 고유의 돌봄업무 외에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4%가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업무 내용으로는 늘봄참여아동 관리(늘봄참여아동 입장지도, 늘봄참여 후 돌봄교실 입실확인, 스케줄 관리, 동선 기록) > 돌봄현황 및 늘봄참여아동 조사 > 학부모 상담(늘봄관련 포함) > 중복(돌봄 + 늘봄) 신청자 상담 및 결과통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7] 늘봄학교 시행 후 저녁돌봄(8시) 및 돌봄 추가업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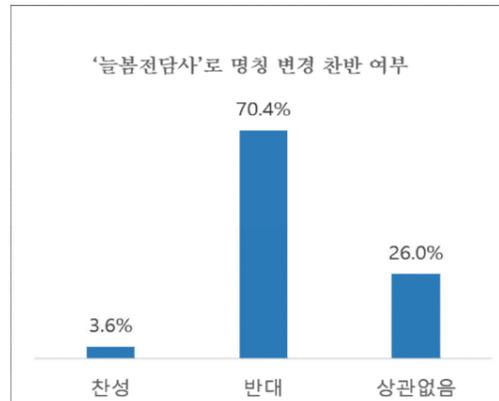
[그림8] 늘봄학교 늘봄실무사 배치로 인한 행정업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71.9%가 아직 잘 모르겠다, 28.1%는 경감된 업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8] 늘봄학교 늘봄실무사 배치로 인한 행정업무 경감 현황



[그림9] 늘봄 시행 후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 명칭 변경 찬반을 보면, ‘반대’ 의견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상관없음’이 26%, ‘찬성’ 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9] 늘봄전담사 명칭 변경 찬반의견



늘봄 시행 후 돌봄교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2학기에 늘봄학교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교실 부족(기존 돌봄교실도 전용교실 부족하여 겸용교실 운영 중), 돌봄교실 아동수 증가 예상, 늘봄과 돌봄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시간제돌봄전담사 직종차별 강화, 늘봄실무사가 배치되었음에도 늘봄문의 학부모상담 증가로 업무 과중 및 피로도 증가, 늘봄실무사 업무와 돌봄업무의 모호성으로 현장 갈등 발생 우려 등을 꼽았다.

[그림10]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8시간제 전환 찬반 현황을 보면, 응답자 86%가 ‘찬성’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10]



2.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8시간 전환!!' 필요한 현장의 소리

[현장의 소리 1]

돌봄반은 아무나 맡아서 해도 된다고 교육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돌봄 행정업무는 아이들이 없는 오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관리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또 방학기간에는 오전 8시~10시, 10시~12시 30분에 자원봉사자를 쓰기 때문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오전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일에 대처가 힘들고, 학부모님들의 모든 연락을 받아서 봉사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학동안 일반 봉사자를 쓰니 방학 때마다 봉사자가 바뀌어 아이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학부모님들도 힘들어 하신다. 결국 지금의 돌봄과 큰 차이가 없는 문제로 현재 저녁 7시까지 돌보는 돌봄과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1시간 늘어난 늘봄의 차이가 될 것이므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소리 2]

돌봄과 늘봄의 구분이 불분명함에 따라 기존 돌봄이 있는데 왜 늘봄이 새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기존의 돌봄을 활용해도 충분한데 늘봄이라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과 교육청 등 고급인력을 이런 곳에 낭비해야만 할까? 제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현장의 소리 3]

국가 정책으로 늘봄이 시행되면서 돌봄을 늘봄에 포함시켜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고는 하나, 돌봄전담사 근무시간과 운영시간이 합치가 안되어 7시~8시 단시간 봉사자 채용 등으로 저녁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과 운영시간을 일치시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늘봄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현장의 소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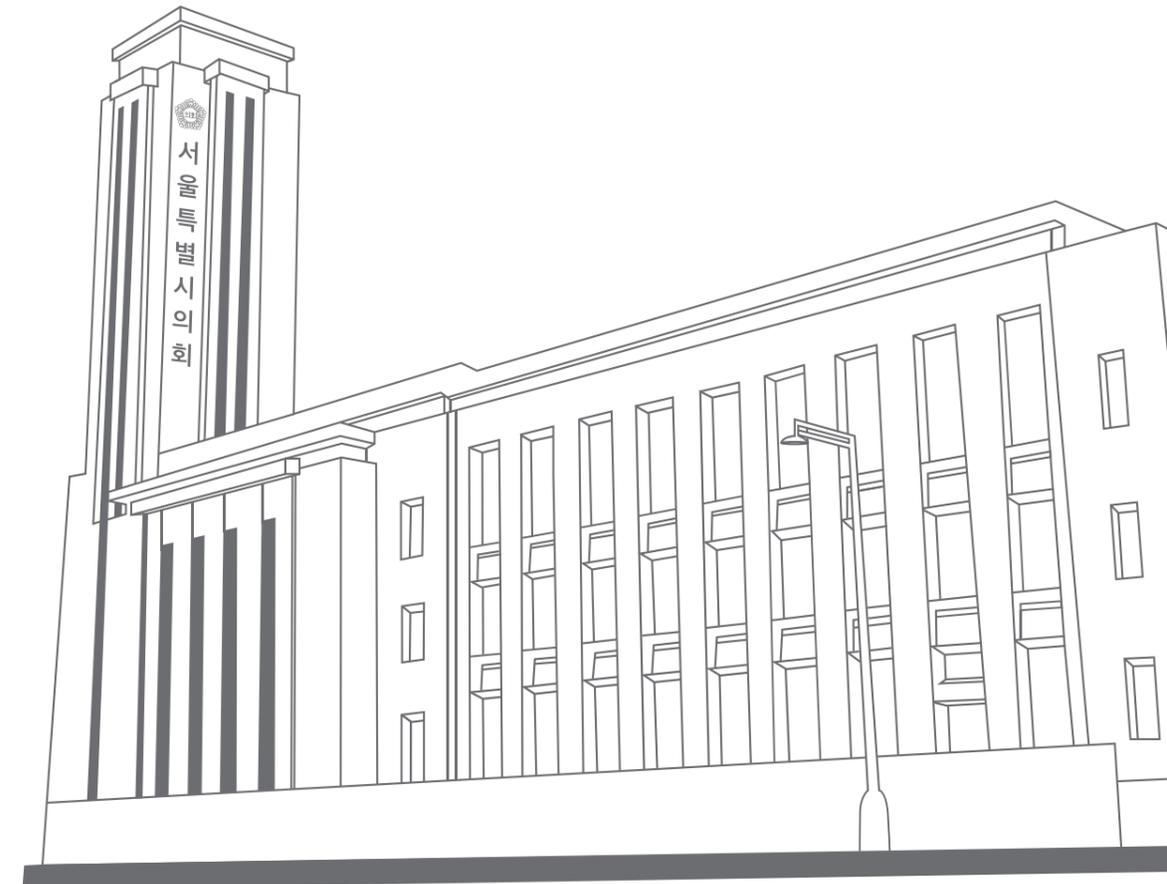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뽑던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4시간을 뽑았지만 시간제로는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늘봄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의 돌봄을 중요시하며 더 많은 시간을 돌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봄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돌봄전담사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제 돌봄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을 자원봉사자로 뺄뺄하여 새로운 시간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일제 돌봄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시간과 돌봄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체계를 위해서는 시간제 돌봄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토 론 문

김지인

서울등촌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지인(서울등촌초등학교 시간제돌봄전담사)

1. 들어서며

저출생을 넘어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지금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명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반론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하에 늘봄학교라는 보편적 돌봄 실현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1학기 시범 실시 이후 1학년 전면 시행을 앞둔 지금 현장과 괴리된 정책 수행과정에서 혼란은 거듭되었습니다. 학생중심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대기자 수요 해소, 실적위주의 정책집행에만 몰두하여 정작 실속 없는 과장광고, 과대 포장 상품을 보는 듯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이 늘봄학교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2. 본론

첫째, **과밀학교의 공간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밀학교의 늘봄교실 부족문제의 해결 없이 늘봄학교 추진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공간의 부족문제는 늘봄학교 초기 모든 연구와 정책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학교 돌봄 공간의 부족으로 시작된 겸용교실 사용은 이미 돌봄 교실이 확대 운영된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서울시 돌봄의 겸용교실은 23년도 기준 404곳(서교연,2023서울형 교육돌봄 관리·운영방안 연구)으로 전체 교실의 22%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계형 교실의 겸용교실 사용률을 더하면 더 많은 교실의 안정적 돌봄이 어렵습니다. 일반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했던 교사, 학생, 돌봄전담사들의 곤란했던 사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봄의 겸용교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급기야 공간부족 문제를 돌봄교실을 합반하고 돌봄 학생들을 재배치하며 맞춤형프로그램 교실로 돌봄교실을 내달라 요구는 학교도 생겨났습니다. 공간부족은 2~3년 후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말한 교육청관계자의 말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2023년 서울형 학급편성 기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밀학교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 현상 또한 존치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내년 2학년 늘봄맞춤형프로그램 신청 수요까지 대비하여 교실부족문제를 돌봄 아동의 맞춤형프로그램 참여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사례는 허울 좋은 늘봄브랜드 통합의 예입니다. 26년까지 전 학년 늘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면 과밀학교에 대한 늘봄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돌봄 확대와 질 높은 돌봄을 목표로 무상 맞춤형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나 실상 대기수요 해소의 방안으로 두 시간짜리 무료 선택형 프로그램을 늘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대학 중심의 늘봄프로그램 사업단을 모집하고 창의 과학재단, 늘봄지원센터 지원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공약했지만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미 방과후 수업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던 방과후 강사들은 무료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수업이 폐지되거나 수업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방과후 업무기피와 방과후 강사 채용의 용이함을 위해 위탁업체를 통해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과후 수업의 공적 역할을 간과한 채 사적영역으로 치부함으로써 외주화에 의한 방과후 강사 수익구조의 불평등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도 대안도 없

이 늘봄학교의 무상맞춤형프로그램 시행은 늘봄학교의 한축인 방과후를 지탱하고 있는 강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진행되었음을 반증합니다. 이는 늘봄실무사 연수에서도 공공연히 이야기되었습니다. 수업구성과 강사채용이 어려울 경우 위탁업체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늘봄실무사 연수에 참여한 실무사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맞춤형 늘봄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이미 검증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단계적 무상 실시하는 방향 하나와 다양한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지원과 같은 시간을 요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따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돌봄 학생의 신청을 배제하는 학교의 경우 돌봄특별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과의 강자 수, 시간 등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돌봄 운영비 확대 및 추가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늘봄학교는 돌봄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침 돌봄, 연계형 돌봄, 방학 연장 운영 시간 돌봄을 봉사자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서울형 늘봄이라 말하는 프로그램 연계형 교실의 돌봄마저 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늘봄교실 전담인력의 부재시간을 봉사자 사용으로 채우는 발상은 아직도 돌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라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돌봄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놀이지도와 생활지도, 또래관계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문적 영역의 노동입니다. 저학년은 놀이 안에 교육이 융합되어 있으며 사회성발달을 위한 결정적시기로 양질의 돌봄 경험이 학생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격과 경력이 부족한 봉사자 사용 시 민원이 대다수 발생하여 자격증과 경력을 가진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자의 사용으로 발생한 민원은 돌봄전담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획기적 전환을 말하는 늘봄학교, 학교의 공격기능의 확대에 맞게 학교 구성원과 늘봄관계자들의 돌봄 전문성이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봉사자 위촉 시 자격증 소지자 우선 위촉이라고 하면서도 봉사료가 지급되는 현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 전담은 봉사자가 아닌 대체인력 또는 자격에 맞는 정당한 임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돌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늘봄이 양질의 돌봄으로 성공 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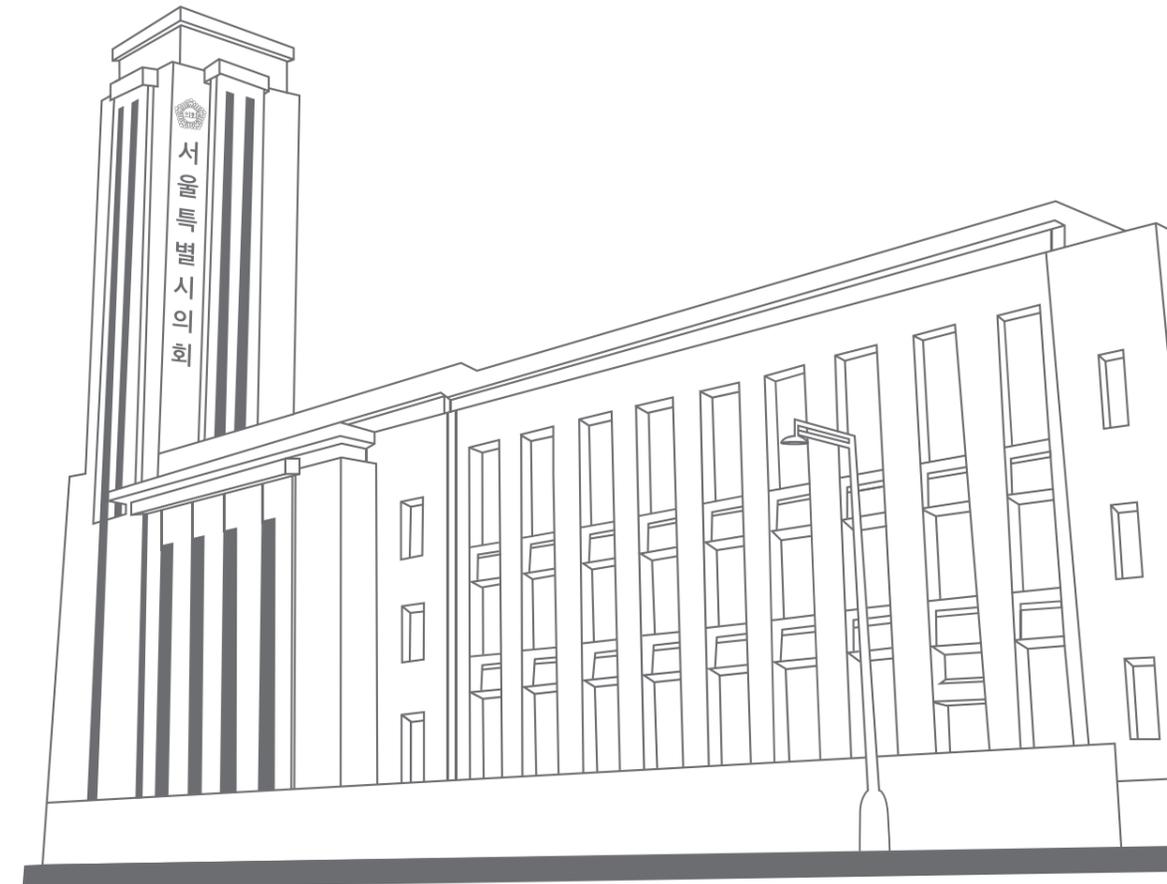
넷째, **안정적 돌봄을 위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아침돌봄과 연계형돌봄, 22년 7월부터는 저녁돌봄까지 늘봄학교 구조가 완성이 되어있었고 교사의 행정 업무를 가져온 상태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많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봄전담사의 업무시간은 학생 돌봄 시간만이 아닌 돌봄 준비시간, 행정업무시간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돌봄전담사의 업무를 학생이 교실에 있는 시간만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여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관리자와 행정가들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6시간 연장 후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겨우 돌봄에 집중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뿐입니다.

<2023년 수원여대 아동친화도시연구조사>에 따르면 아동친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아동의 안전이 첫 번째이고 어른과 아동의 낮은 비율을 두 번째로 들고 있었습니다. 양질의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 학생과 전담사의 상호작용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간접적 경험을 높이고 보호자를 대신하는 돌봄전담사와 정서적 유대를 높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까지 가져옵니다. 특별프로그램시간에 강사와 함께 학생을 지도하고 놀이를 같이 함으로써 학부모와 상담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중구형 학교 돌봄터가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토 론 문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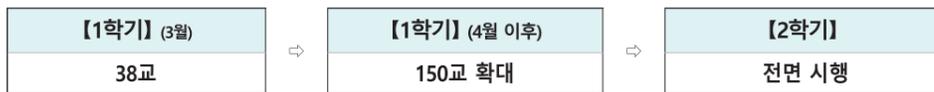


1. 서울시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추진 현황

교육정책국 |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02-1200-9001 | 방과후학교·늘봄지원담당 홍진호 02-1200-9082 | 담당 임윤대(이승이) 02-1200-9022

□ 늘봄학교 추진 현황

○ 2024년 서울교육청 늘봄학교 단계적 운영 확대(초1)



□ 늘봄학교 2학기 추진 학교 지원 현황

- (인력 지원) 늘봄전담실무인력(늘봄실무사) 교당 1명 배치, 자원봉사자 지원 등
- (공간 지원) 설계도서 포함한 설계 예시안 늘봄교실 5종, 학년 연구실 2종 개발 및 학교 보급
 - 늘봄교실 공사 466교 809실, 학년연구실 리모델링 242교(교당1실) 구축
 - 아이들이 쾌적한 늘봄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꿈을 담은 늘봄교실' 시설비 지원
 - 선생님의 수업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공간을 위한 학년연구실 시설비 지원

< '꿈을 담은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 유형 설계 사례 >



○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

- (교육청 자체) 학생들이 원하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학교에 매칭
 - '어린이요가', '연극놀이 뮤지컬' 등 여름방학 257개 프로그램 지원
 - '체형교정 힐링댄스', '그림책 미술여행' 등 2학기 114개 프로그램 학교 매칭
 - (대학 연계) 숙명여대, 서울교대, 서경대 등 3개 대학과 늘봄프로그램 업무협약
 - 우수한 대학의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학교에 매칭 지원할 수 있도록 MOU 체결
- ※ 열씨구!국악탐험대 등 22종 프로그램, 46교, 강사 54명 매칭 지원 및 지원(확대 예정)

-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연계) 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 (주) 스팀도서관 등 7개 기관 선정
 - 학교 밖 지역 기관을 공모·선정,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교에 매칭 지원
- ※ 숲 생태계, 숲과 문화 등 산림청 프로그램 19교, 강사 27명 매칭, 지역 기관 '하늘에서 날리고 땅에서 달리고' 드론 등 프로그램 17교, 24명 매칭(확대 예정)

□ 지역과 함께 하는 늘봄학교

○ 거점형키움센터-교육지원청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 (교육청-서울시)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 간 늘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교육청) 공간 부족 학교 수요 파악 및 키움센터 연계 및 인솔 인력 지원
 - (서울시) 키움센터 셔틀버스 계약, 인력 지원, 안전관리
 - ※ 차량운영비: 교육청과 서울시 공동 비용 부담(1:1), 늘봄 프로그램 운영비 분담 등
-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시 거점 4호 키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연계 모델 구축
 - 키움센터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학교 밖 늘봄공간 운영(매봉초, 오류남초)
 - ※ (프로그램) 댄스교실, 드림교실, 연극놀이, 팝업북만들기, 키친사이언스, 동물교감 등
- (북부교육지원청) 서울시 거점 1호 키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공간 마련으로 인근 학교 지원(노원초, 노일초)
 - ※ (프로그램) 도예, 신체활동, 요리, K-pop, 베이커리, 서커스 활동 등
- (서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지역 거점형 키움센터와 협약

특색③ 지자체 연계형 늘봄 '거점형키움센터'	→ 운영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과대·과밀학교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교육청) △거점형키움센터 연계 수요조사 △학생 인솔 인력 지원 - (서울특별시청) △셔틀버스 계약 및 차량운영비 공동부담(1:1) △인력 및 안전 관리 지원 △ 늘봄 프로그램 운영비 분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교육지원청) 키움센터 1호 운영 예정 (노원초, 노일초) · (남부교육지원청) 키움센터 4호 운영 중 (매봉초, 오류남초) <p>남부 키움센터 활동 모습 북부 키움센터 운영 공간</p>

□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자원 지원

- (인력 지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늘봄학교 봉사단」 배치
 - (자원봉사자 역할) 학생 돌봄, 학생 인솔(차량 이동 포함), 강사 보조, 프로그램 준비, 교실 정리, 행정 지원 등 사전 교육을 통한 늘봄학교 지원
- (1학기 배치 인원) 희망하는 48개교 120명 배치
- (2학기 배치 인원) 2학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청학교 자원봉사 지원 예정

